



문재인, ILO 동의안 제출 오히려 노동법 개악 선전포고다

관련 기사 8, 9 면

민주노총,
교섭전략특위
추진 않기로 하다

9면

공무원 노동기본권도,
해고자 원직복직 약속도
무시하는 문재인

16면

문재인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누구를
위한 것인가?

5면

유럽의회
선거 결과와
영국 노동당의
위기

6, 7면

미중 무역전쟁과
화웨이, 격화되는
제국주의 갈등

4면

노동자 희생 강요할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하라

15면

6·1 서울 쿼터페이드
성소수자 혐오
부추기는 황교안,
여전히 “나중에”
라는 문재인

10면

암 발생과 사망률도 계급에 따라 불평등하다

정호중

암 사망자가 매년 늘고 있다는 보고가 발표됐다. 5월 1일 보험개발원은 생명보험 가입자 중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2008년 1만 8140여 명에서 2017년 2만 494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암 치료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됐지만 발병의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경제 위기 하에서 노동조건 악화, 환경 악화 등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보다 한 달 앞선 4월, 한화생명 은 자사의 보험가입자 520만 명 중 2000~2017년 18년간 암 보험금을 수령한 30만 명의 정보를 토대로 '빅데이터로 본 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이 기간에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빠르게 늘었는데,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발병률과 사망률에서 큰 차이가 났다. 특히 남성의 경우 직업별로 차이가 있었다. 직업이 없거나 1차 산업,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폐암 사망률은 25~26퍼센트 정도로 전체 평균(19.3퍼센트)보다 높았다. 깊이 파져 보지 않아도 분진과 유해가스에 오래 노출되는 환경, 장시간 노동, 저임금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 등이 영향을 끼쳤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빈부격차

암 환자의 사망률은 소득에 따라 큰 차이가 났다. 가구소득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5년 이내 사망률이 12퍼센트에 머무른 반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 그 수치는 39퍼센트나 된다.

민간보험사의 통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통계 결과는 현실의 일부만 보여 주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아마도 누구를 상대로 보험 가입을 늘려야 할지, 어떻게 하면 보험금 지출을 줄일

수 있을지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일 듯하다. 그럼에도 직업과 소득 등 사회적 불평등이 암 발생률과 사망률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을 얼핏 보여 준다.

좀 더 객관적인 지표는 통계청과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서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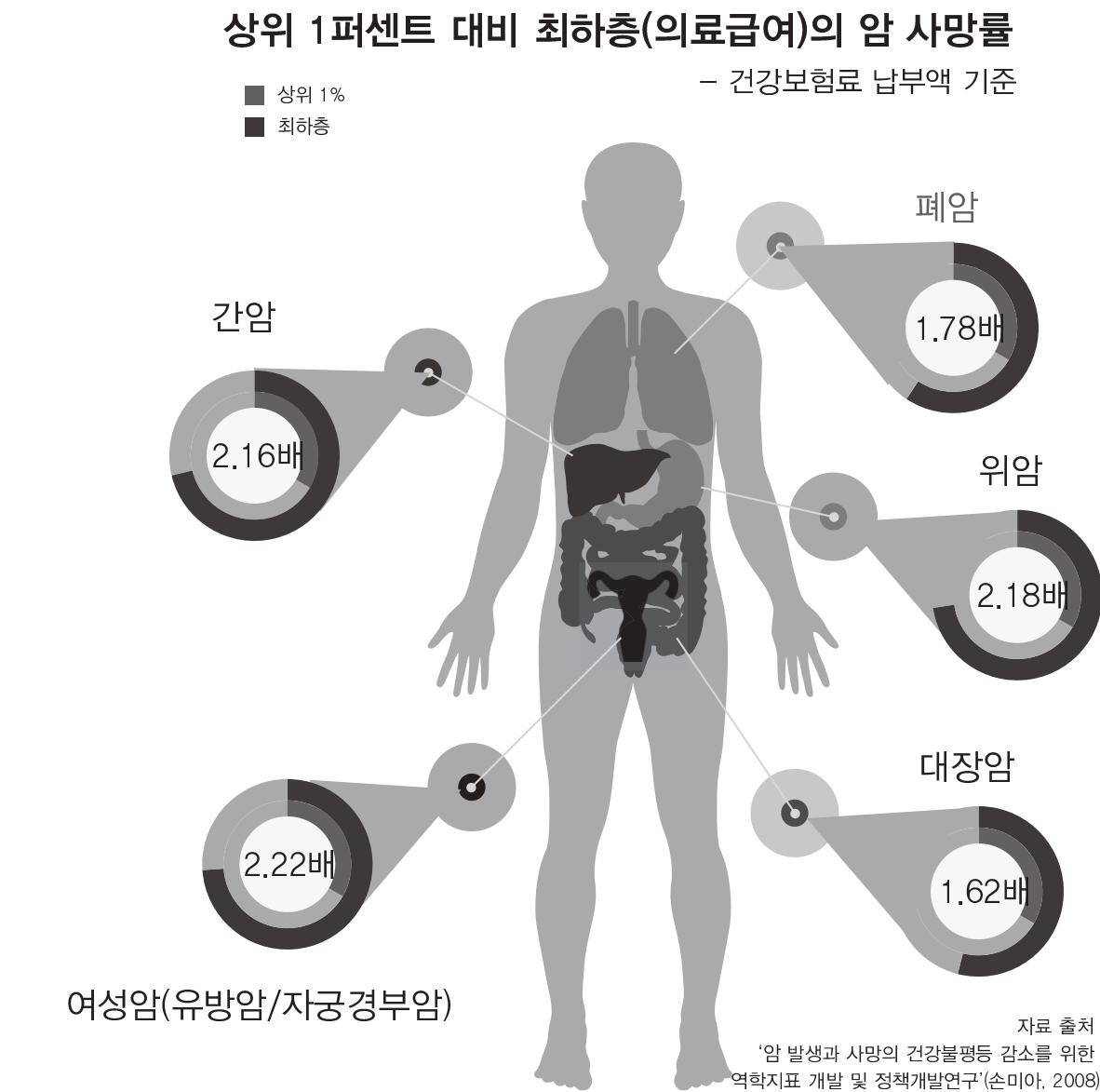
2018년 9월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사망통계원인'을 보면 2017년 암 사망자는 7만 8863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사망자의 약 27.6퍼센트를 차지하는데, 암 사망률도 인구 10만 명 당 153.9명으로 집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2018년 4월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 질병관리본부와 통계청의 조사를 바탕으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소득·교육 수준에 따라 암 검진율과 사망률에서 큰 차이가 난다.

소득 수준을 다섯 단계로 나눴을 때 최상위 그룹의 위암 검진율은 65.3퍼센트였던 반면 최하위 그룹은 47.2퍼센트로, 큰 차이가 났다. 간암도 최상위 그룹(36.9퍼센트)과 최하위 그룹(22.4퍼센트) 사이의 차이가 컸다. 교육 수준별로는 유방암에서 그 차이가 크게 났는데 40세 이상 인구에서 '전문대졸 이상'(69.5퍼센트)과 '초졸 이하'(56.3퍼센트)의 검진율 차이가 매우 컸다. 암 사망률도 교육 수준에 따라 최대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단지 정보가 많아서만은 아니다. 검진을 준비하고 받는 일에는 생각보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피로에 절은 몸을 이끌고 검진을 받아 봤자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니 미루고 미루다 시기를 놓치기도 한다.

좀 더 체계적인 보고는 2008년 손미아 강원대 교수(예방의학)가 작성한 '암 발생과 사망의 건강불평등 감소를 위한 역학지표 개발 및 정책개발연구'



에서 볼 수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록이 있는 3259만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것인데, 노무현 정부 시절 시작된 연구가 이명박 정부 시절 완료됐지만, 어떤 일인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0년 <한겨레21> 등이 보도해 널리 알려졌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상위 1퍼센트의 전체 암 발생 위험을 1로 봤을 때 최하위(의료급여대상) 소득계

층의 암 발생 위험은 1.07로 조금 높았다. 위암의 경우 1.33, 폐암 1.66, 간암 1.61, 대장암 0.96 등이었다. 여성암(자궁경부암과 유방암)의 경우 그 비율이 2.15로 사회경제적 조건이 여성들의 암 발생률에 끼치는 영향이 특히 컸다.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더 현격한 격차를 보였다. 상위 1퍼센트의 암 사망 위험을 1로 봤을 때 최하위층의 사망 위험비는 1.93이나 된다. 위암 2.18, 폐암 1.78, 간암 2.14, 대장암

1.62, 여성암 2.22 등이다. 당연히 생존율은 그 거꾸로다.

물론 이 지표들은 보험료 납부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보니 소득 격차도 제한적으로만 반영한다.(보험료 상한제가 있고 소득 파악도 제대로 안 된다.)

그럼에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된 것을 보면 암 발생 위험과 이로 인한 사망률에서 계급 간 불평등이 존재함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윤종오 전 민중당 의원 집 경매 낙찰 위기

민주당 울산 북구청장의 야비한 견제

김지윤

박근혜 정부의 진보 의원 탄압으로 의원직을 잃은 윤종오 전 민중당 의원의 집이 경매에 부쳐지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다. 이 집에는 윤 전 의원이 가족과 살고 있다.

윤종오 전 의원이 2011년 구청장 재임 당시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의 입점 허가를 반려하자 해당 부지 지주들이 울산 북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울산 북구가 소송에서 패소하자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구청장 박천동은 윤종오 전 의원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박근혜 정부의 표적 수사와 정치 탄압으로 의원직 박탈 위기에 몰린 윤종오 전 의원을 압박하기 위해서였다. 심지어 코스트코 설

립이 완료된 뒤라 지주들이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는데도 박천동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서 구상금을 청구했다고 윤종오 전 의원 측은 지적했다.

울산 주민 1만 3000여 명이 윤종오 전 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주민청원을 하고, 지난해 12월 구의회가 이 청원을 가결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했다. 민주당 소속 신임 구청장 이동권이 이 의결을 수용하면 될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동권 구청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윤종오 전 의원은 구상금에 소송비용까지 더해 4억 원이 넘는 돈을 물어벌 처지가 됐다. 이 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매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윤종오 전 의원 측은 행정안전부의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의

법률 자문 등을 제시하면서 구상금 면제가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지만 이동권은 갖은 핑계를 대면서 외면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구청장이 시작한 공격을 민주당 구청장이 확실히 마무리하고 있는 셈이다. 윤종오 전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촛불 여파로 당선된 민주당 구청장의 행태가 "자유한국당 집행부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매 중단하라

그간 지배자들은 울산에서 당선한 진보 국회의원·구청장 등을 집요하게 탄압해 왔다. 이동권 구청장의 야비한 공격도 그 연장선에 있다.

윤종오 전 의원은 2016년 총선 때

민주노동당 전락 후보로 선정돼 당시 여당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당선했는데, 선거 기간부터 노골적 견제와 공격에 시달려야 했다. 박근혜 정부의 검찰은 선거기간을 포함해 무려 네 차례나 압수수색을 했다.

정권이 바뀌고도 수난은 끝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도 기소를 기어코 유지했다. 결국 윤종오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말았다. 이제 민주당 구청장에 의해 집까지 빼앗길 처지다. 윤종오 전 의원 측은 6월 27일로 예정된 2차 기일에는 아파트 가격이 본 감정가보다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낙찰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동권 구청장은 윤종오 전 의원 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중단하고 코스트코 구상금을 면제하라!

새로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촛불 염원을 저버리다

김문성 김영익 김하영 최일봉 지음
책갈피 | 704쪽 | 22,000원

문재인 정부의 모순과 불충분성을 기록한 글들을 엮었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역사를 돌아보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행보 그 이면에 깔린 동학을 규명하고 진정한 진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대안을 찾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 서평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사진 출처 자유한국당

5월 23일 철원 CP 철거현장을 방문한 황교안

문재인의 개혁 배신 탓에 자한당이 안하무인이 되고 있다

김문성

자유한국당(자한당) 대표 황교안이 5월 23일 휴전선 근방 군부대를 방문해 이렇게 말했다. “군은 정부 입장과 달라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너무 유화적이어서 문제라는 입장을 굳이 내달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내내 내각에 있으면서 총리까지 지낸 자답다.

민주당은 황교안이 군에 항명 선동을 했다고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내란 선동이라는 비난도 있다. 황교안과 자한당은 기회가 오면 그런 짓을 충분히 벌이고도 남을 자들이지만, 이 발언에 당장 그런 함축이 있는 건 아니다.

먼저, 승산이 없다.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군 통수권을 쥐고 있을 때도 못 한 일이다. 또, 지배계급이 분열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금이 군부의 무력에 의존해야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그 정도 상황이라면 자한당 지도부가 일부 자당 의원의 5·18 망언이 잘못이라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황교안의 발언은 군부를 포함해 선출되지 않는 권력 집단인 고위 국가관료들에게 총선·대선을 앞두고 자한당을 지지해 달라는 호소이다. 국가관료가 선출된 정부에 충성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군부는 우파의 보루 아닌가.

이미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의 관료들과 청와대 사이에 빼적거리는 모습들이 드러났다. 특히, 주미 대사관 관료들이 <조선일보>의 위싱턴 특파원과 편집국장을 거친 구 여권(자한당) 국회의원에게 기밀 정보를 제공한 것은 시사적이다. 지배계급 정당들 간 분열이 격화하는 동시에 국가 관료 안에서 이반 현상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음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전직 외교 관료들조차 기밀 누설을 국가 기강을 해친 행위라고 비난했다. 자한당의 ‘오버’에 대한 반작용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가 기강 논란은 현 정부의 국가 기구 통제 능력에 대한 권력층 일반의 의심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의 “복심”이

라는 양정철의 공식 정치 복귀 후 행보도 시사적이다. 양정철은 민주당 민주연구원장으로 임명됐는데, 이 지위를 통해 현 여권의 내년 총선과 대선을 기획할 듯하다. 그런 그가 공식 정치로 복귀하자마자 유시민과 조국 등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들에 관해 공개 언급하고 국가정보원장(서훈)을 만났다.

특히, 양정철과 국정원장의 만남은 청와대도 현 상황을 심상치 않게 보고 있음을 뜻한다. 양정철은 이 만남을 통해 자신이 진짜 실세이고 문재인의 “복심”임을 보여 주는 효과를 냈다.

외교부 기밀 유출 건, 검찰과 경찰이 갈등하는 장자연 사건 수사 건, 경찰 내 갈등(청룡봉사상) 등 최근 사건들 모두에 조선일보사가 얽혀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현 여권과 조선일보는 이미 지난해 초 드루킹 건과 장자연 건으로 충돌한 적이 있었다. 물론 친문의 핵심 인사인 김경수 경남지사는 선거 불법 개입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반면, 조선일보사 사주 일가는 장자연 건 연루 사실이 인정됐는데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세력 역전

자한당의 도발적 언행은 사회의 계급 간 세력균형을 흔들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는 단순히 자한당이 2016년 10월 이전의 지지율이나 세력을 회복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래 봐야 촛불 직전일 뿐이다. 우파는 촛불 운동이 낳은 성과(대중의 조직 확장과 의식 고양)를 없애 버리고 싶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도파로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우파에 대한 용두사미식 투쟁과 타협, 왼쪽에게는 온건파 포섭과 좌파 타격 등을 병행하는 식이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자한당의 국회 폭력을 비난하고 자한당 의원들을 형사고발했지만, 진짜로 자한당 의원들이 구속되고 처벌받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사실 블랙리스트 연루, 세월호 참사 책임, “민중은 개·돼지” 발언 등 “관료 적폐”를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청산한 사례가 없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노동법 개혁 시도에 항의하는 집회를 국회 앞에서 열었던 민주노총의 집행 간부 6명(금속노조 1인 포함)에게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용자 계급에게 현 여권을 믿어 달라고 신호를 보낸 것이다.

문재인은 외교부 기밀 유출 건에 강경 대응한다면서도 최근 관료들을 내부 승진시키는 대대적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정부 관료들에게 환심 사기용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그런 진심이 통해서일까? 5월 29일 자한당이 산불대책 논의를 하자며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의 차관들을 부른 회의에 대상자 전원이 불참했다.

청와대가 검찰에 세월호 참사 재수사(특별수사단 포함)를 지시해 달라는 청원도 문재인 정부는 거절했다. 황교안, 기무사, 국정원 등이 모두 수사 방해, 유가족 감시, 은폐 공작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데, 청와대의 냉담한 반응을 보고 우파는 “그럼 그렇지” 할 것이다.

정부기관인 국민연금금도 노동자들이 구조조정 신호탄이라며 결사 반대하는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에도 찬성표를 던질 예정이다.

정리하면, 문재인 정부는 거듭거듭 우파와 타협해 왔고, 그 덕분에 우파에게 기회가 거듭 찾아오고 있다. 어떤 일은 한술 더 뜬다. 최근의 인보사 허가 취소 사태(노무현 때의 황우석 사태를 떠오르게 하는)는 문재인이 박근혜보다 더 강력하게 의료 영리화를 추구한 결과다.

우파의 칼끝이 궁극으로는 좌파와 노동운동을 겨누고 있으므로 좌파와 노동운동이 우파를 반대하는 건 당연하다. 진정한 쟁점은 우파에 반대할 때 진보파와 노동운동이 독립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즉, 노동법을 개악하고 친기업 규제 완화에 몰두하는 문재인에게도 똑같이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민주노총이 집행 간부들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비난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은 불길하다. 진보정당들도 이 문제를 둘러싸고 명확하지 않은 듯하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간부 6인 구속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개악 강행 의지 밝힌 것

구속영장 기각하라

김문성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집행간부 6명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월 초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노조 활동 제약 등 노동개악 법안들이 국회 환노위에서 다뤄지는 것에 항의하는 집회가 폭력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경찰 대열에 막혀 국회에 단 한 발도 들어가지 않았고, 그저 경찰이 쳐놓은 방어용 펜스를 반복해서 치웠을 뿐이다.

이런 상징적 수준의 항의 행동을 두고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과잉 대응을 해 왔다. 수백만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더 나쁘게 만들면서 노동자들이 항변하는 것조차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관할 경찰서인 영등포경찰서에 15명이나 되는 수사전담반을 꾸렸다. 이는 지난해 지방선거 선거사범 총력 단속 수사전담반보다 더 큰 규모다.

그리고 4월 13일에는 민주노총 간부 4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구속이든 수색이든 영장이 법원에 청구가 됐다는 점에서 경찰과 검찰이(자기네끼리는 서로 싸우는지 몰라도) 노동 탄압에서 한통속임이 새삼 확인됐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이를 판단해 법원에 영장 발부를 청구하는 것은 검사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런 강경 대응이(우파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자체의 입장이라는 뜻이다.

특히,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등은 정부와 우파의 거지말과 달리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들을 더 열악하게 만들 것이다. 물론 기존 조직노동자들에게도 위협적 개악이다. 이런 개악을 비민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문제이지 거기에 항의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구속영장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

자한당 핑계 대며 할 개악은 다 한다

현 여권은 항상 ‘자한당 때문에’, ‘국회 때문에’ 하며 그들 탓을 해 왔으면서 막상 노동자들이 국회에 항의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자신이 사용자들을 위한 노동개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친사용자 개악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에 대해 문재인 정부

가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이고, 문재인 경찰에 항의한 노동자들이 정당한 이유이다.

경찰은 5월 22일 대우조선해양 민영화 매각에 반대하는 대우조선노조와 현대중공업노조의 상경 집회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굴었다. 당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현중 서울사무소 진입 시도를 하면서 경찰과 충돌한 것을 놓고 경찰은 이를 만에 조합원 1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행히 기각됐지만, 그런 법원이 진보적이라서가 아니라 그만큼 무리하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운동에 강경 태세를 보이는 것은, 물론 최근 살아나는 노동자 저항 우려하는 사용자들을 향해 안심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자한당의 우파적 공세는 사용자 계급의 바로 이 불안감을 등에 업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뿐 아니라 지정학적 불안도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 2년 전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 주도자들을 최근에 기소한 것, 민주노총 활동가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현대중공업 노조의 주주총회장 점거 농성 직후에 이뤄진 것 등은 의미심장하다.

문재인 정부가 중도파로서 우파와 투쟁도 하지만, 이는 주로 누가 더 사용자 계급을 위해 효과적으로 통치하느냐를 둘러싼 것이다. 문재인(민주당) 정부와 협력해서 우파도 약화시키고 진보개혁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진보운동 내 온건파들의 계산이 거들 실패하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기층 노동자들이 능동적으로 참가하는 투쟁에는 강경하게 나오면서 상층 지도자들은 사회적 대화의 틀로 들어오게 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진보 염원을 배신해 온 2년이 너무 명확해 기층에서 호응이 없는 탓에 이런 시도가 잘 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니 정부는 더 신경질을 내는 것이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가 본격화되고 북·미 갈등이 다시 시작되면서 남북 관계가 경색되는 경우에 기층 분위기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온건한 일부 진보파의 태도도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좌파를 단속하려는 압력도 커질 것이다. 이번 무더기 구속영장 신청은 문재인 정부가 뻔한 방향으로 이런 상황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사진 출처 노동법개정저지

4월 3일 노동개악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점입가경 미·중 무역전쟁

이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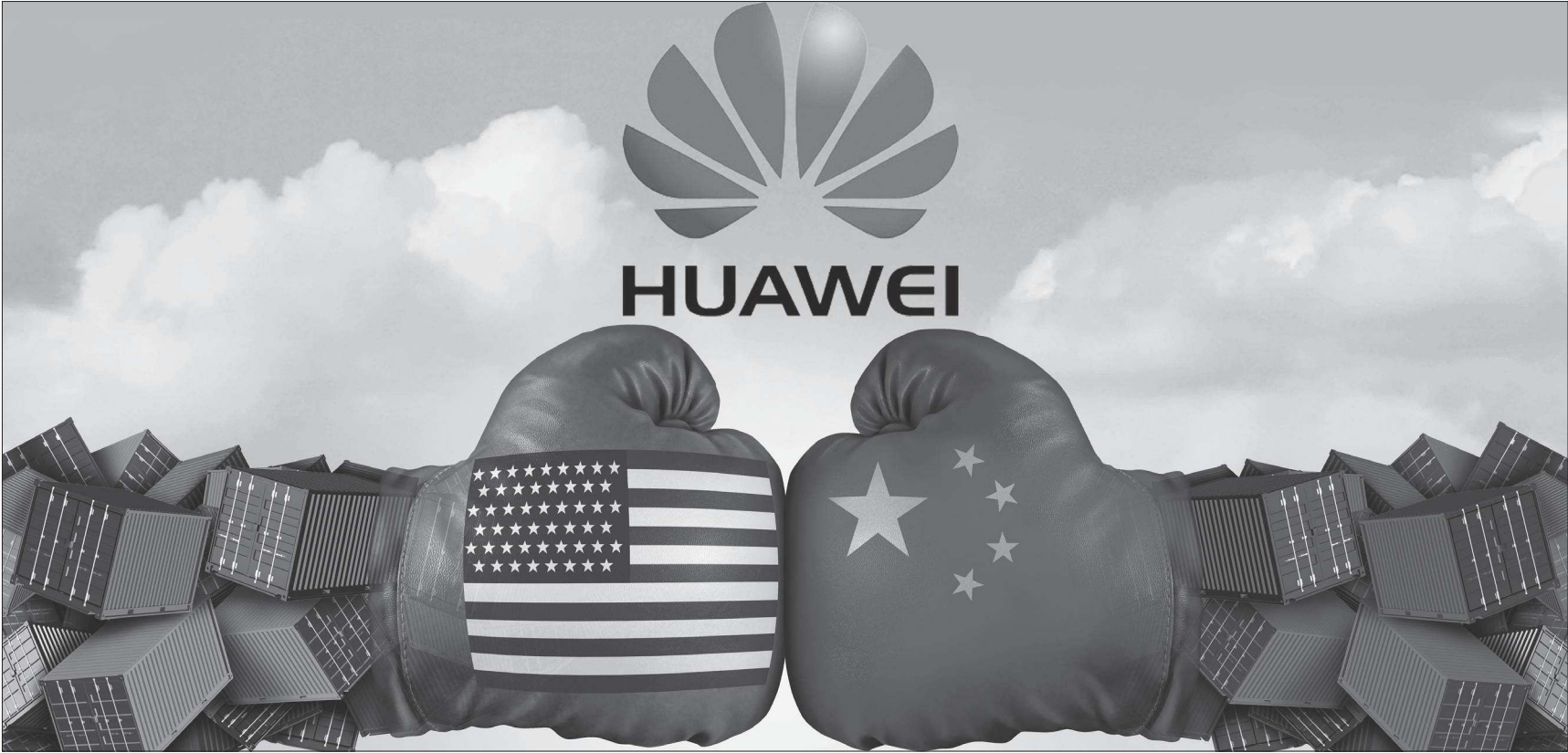
미·중 무역전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5월 초 미·중 무역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자 미국은 5월 10일 중국 수출품 20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1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올렸다. 중국도 6월 1일부로 미국산 제품 600억 달러어치에 관세를 최대 25퍼센트로 올리며 맞받았다.

이어서 미국 상무부는 중국 통신 네트워크 업체인 화웨이를 ‘거래 제한 기업 리스트’에 올렸다. 이후 구글은 화웨이 휴대폰에 운영체계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고, 인텔이나 퀄컴, 영국 반도체기업 ARM 등 주요 반도체 업체들도 화웨이에 반도체 부품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온라인 몰에서 화웨이 노트북을 제거하며 화웨이 제재 대열에 동참했다.

미국 정부는 세계 각국에 화웨이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말도록 압력을 넣고 있고, 영국, 독일, 일본 등이 이에 화답하며 화웨이 통신장비를 쓰지 않겠다고 했다. 각국의 기밀을 빼돌려 중국 정부에 제공한다는 것이 화웨이 제재의 이유지만, 진정한 목적은 화웨이의 글로벌 5G 시장 선점을 막기 위해서다.

화웨이 사례는 이번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을 잘 드러낸다. 중국이 첨단기술 육성 계획인 ‘중국제조2025’를 추진하자 미국은 이 계획을 (국가의 지원에 따른) 불공정 거래, 기술 도적질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중국제조 2025는 미국이 무역 합의를 파기하는 이유가 됐다.

이처럼 세계 패권을 두고 패권국인 미국과 그 최대 경쟁자인 중국이 정치·경제·군사 분야에서 갈등과 대립을 드러내고 있다. 오늘날 미·중 무역전쟁은 두 제국주의 국가들이 벌이는 치열한 경쟁의 단면인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세계 패권을 두고 두 제국주의 국가들이 벌이는 치열한 경쟁의 단면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가 17퍼센트를 점유해 2위를 차지했는데 미국의 전방위적 제재로 그 성장세가 꺾일 듯하다. 5G 통신장비 분야에서 화웨이의 독주(獨走)는 저지당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화웨이는 이전의 중상통신(ZTE)과는 다르다. 미국의 제재로 파산 위기에 처했던 ZTE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했다. 규모나 기술력, 부품 조달 창구의 다양화 덕분에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로 사업이 크게 위축될 수는 있어도 파산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도 미국에 반격하고자 여러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듯하다. 5월 20일 시진핑은 장시성 남부의 희토류 공장을 시찰해 희토류를 무역전쟁의 보복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몇 년 전 일본에게 사용해 성공했던 방법

이다. 또 중국은 애플 같은 미국 기술 회사의 중국 진입을 막고자 새로운 사이버보안법을 만들었다. 미국산 펠로우 제품에는 반덤핑조치를 내렸다.

그러자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철도차량 제조업체인 중궈중처(중국중차)가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며 위싱턴 지하철 철도차량 입찰을 막는 법안을 제출했다. 미국은 중국제조2025에 담긴 10대 산업 전체로 무역전쟁을 확장할 태세다.

경제적 효과

일본 방문 도중 트럼프는 중국에 부과한 관세로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는 미·중이 상대방에게 무자비하게 때린 관세 폭탄의 피해를 서로 입고 있음을 보여 줬다.

트럼프가 화웨이와 그 계열사 70여 곳을 제재하자 미국 시골 지역 이동통

신업체들이 갑자기 위기에 처했다. 미국 소도시와 시골 지역 무선통신 사업자들이 저렴한 화웨이 통신장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상원은 7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화웨이 장비를 교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미국 시골 지역에서 휴대전화와 인터넷이 안 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수석 경제학자 기타 고퍼나트는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이라는 공동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업체에 부과한 관세 수입은 미국 소비자들이 전적으로 부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탁기 등과 같이 대중국 관세 가운데 일부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돼 왔고, 나머지는 미국 수입업체들이 이익 마진을 낮추면서 관세 충격을 흡수해 왔다.”

중국이 아이폰 사용을 제한하면 전 세계 아이폰 사용자의 3분의 1인 2억 4000만 명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

다. 또 아이폰 부품업체 팹스콘에 고용돼 있는 노동자 100만 명 이상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승리가 임박한 것처럼 트윗을 날리는 트럼프나 대장정 출발 기념관을 찾아 현화하는 시진핑이나 황당하고 웃기기는 마찬가지다. 세계 패권을 두고 벌이는 최근의 미·중 무역전쟁을 중국 공산당이 1934년 국민당을 피해 산간벽지로 도망갔던 대장정과 비교하는 것은 전형적인 피해자 코스프레다.

IMF는 미·중 무역갈등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전 세계 경제성장률이 0.2~0.8퍼센트포인트 하락할 것이라 전망했다. 그리고 올해 세계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네 요인 중 하나로 미·중 무역전쟁을 지목했다. 6월 말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 때 트럼프와 시진핑이 협상을 타진하겠지만 그것으로 미·중 무역전쟁이 끝날 것 같지 않다.

무역전쟁으로 심화된 군사적 갈등: 남중국해·대만해협

화웨이 제재 사태로 미·중 무역전쟁이 첨예한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남중국해에서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5월 17일 미국 구축함 프레블함이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 부근을 통과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쳤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미군 군함의 이런 행위는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관계 해역의 평화와 안전, 질서를 깨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군의 남중국해 항해는 올해 들어 적어도 다섯 번째다. 5월 6일에도 미국 군함 2척이 게이브 암초(중국명 난선자오)와 존슨 남 암초(중국명 초과자오) 인근 해역에 진입한 바 있다. 반면 중국은 남해9단선을 근거로 남중국해 대부분의 해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인공섬과 암초 등에서 군사시설

을 건설해 왔다.

미국은 대만과 관계 강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 하원은 5월 7일 ‘2019 대만 보증법’과 ‘미국의 대만공약과 대만 관계법 이행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미국이 대만에 첨단 무기를 판매하고 군사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중국은 미국의 이런 조치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미·중 대립이 심각해지면서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지난 5일 중국군은 대만 인근인 저장성 해역에서 실사격을 포함한 군사훈련을 대규모로 벌였다. 대만도 중국의 침공을 가정한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곤 한다. 4월 30일 대만 전투기가 중

국 전투기를 향해 플레어를 쏘다. 대만은 “플레어 발사는 방어적 행위여서 교전으로 확대되진 않았다”고 밝혔지만 충분히 군사적 충돌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중국 폭격기는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빈번하게 침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내년 1월에 열릴 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있지만 이는 협소한 얘기다.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긴장 고조나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미국의 대립 등은 무역전쟁처럼 제국주의 국가들의 세계적 패권 경쟁의 단면이다.

남중국해의 군사적 긴장을 이해하려면 제국주의적 세계체제에서 경제적 경쟁이 지정학적 경쟁으로 치닫게 되는 논리를 설명한 부하린과 레닌의 제국주의론이 필요하다.

곤혹스런 처지의 한국

미국이 한국에 화웨이 제재 동참을 요청하면서 곤혹스런 처지에 빠진 쪽은 LG유플러스다. LG유플러스는 통신장비의 30퍼센트를 화웨이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고, 5G 망도 화웨이 제품으로 구축할 계획이었다.

화웨이 제재로 삼성전자가 수혜를 볼 것이라고들 하지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삼성전자가 휴대폰에서는 득을 보겠지만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지 못할 경우 손실도 생겨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화웨이 제재가 제2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2017년 한국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자 중국이 한국에 압박을 강화했고, 결국 롯데가 중국 시장에서 철수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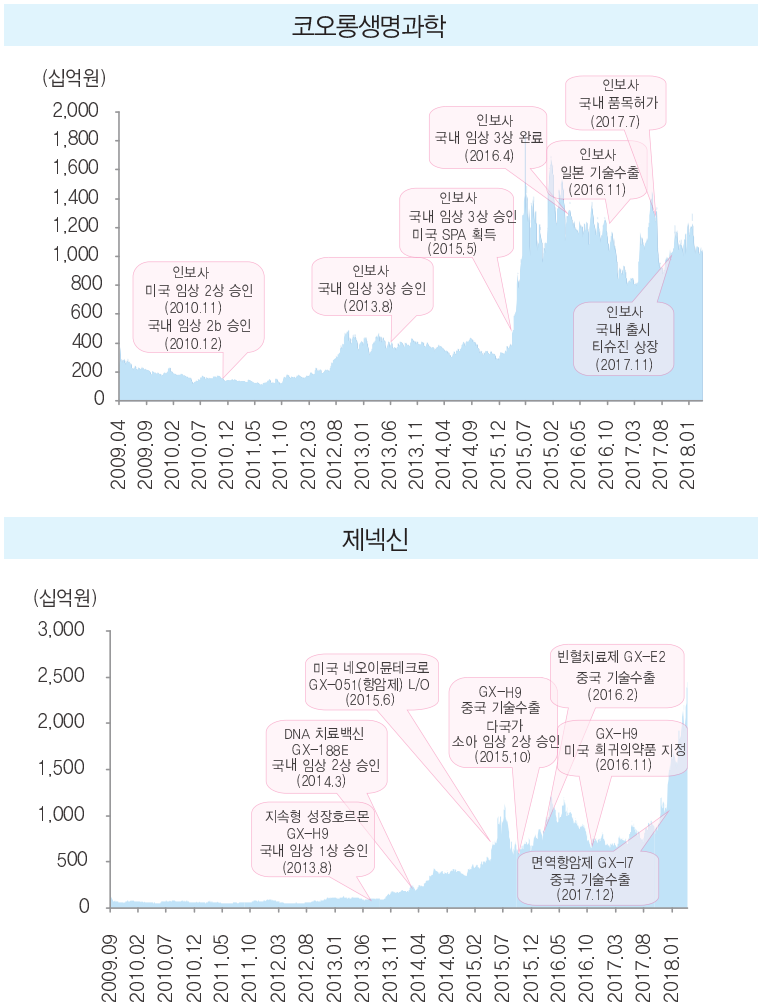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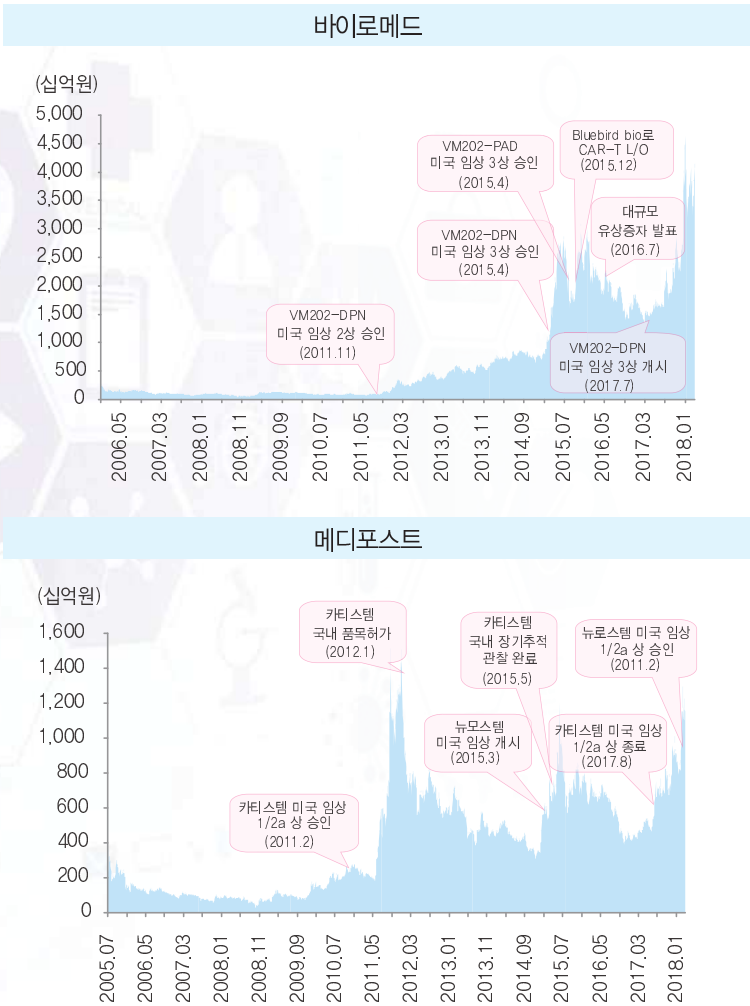
미국의 압박으로 한국 정부가 화웨이 제재에 동참하게 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중국에 생산 기반을 둔 많은 기업들이 중국의 온갖 압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래저래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제국주의 경쟁에서 장기판의 졸 같은 신세다.

용어 설명
대만 관계법 1979년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는 대만에 무기 제공을 보장한 법
플레어 적의 쏜 열 추적 미사일을 피하고자 발사하는 기만체

연구개발 진행 임상 이벤트에 따른 주요 미국 바이오 기업 시가총액 추이



출처: KDB 투자증권, 'R&D 이벤트에 드리븐되는 신약개발 기업' 주가

특별 기고 | 우석균 보건 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문재인 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자본주의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면 언제나 놀란다. 이미 《공산당 선언》에서도 “부르주아지는 생산 도구들에, 따라서 사회관계들 전체에 끊임없이 혁명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세계 어디에서도 쓰지 않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들고 나와 ‘혁명위원회’까지 만들어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 미래차, 3D 프린팅, 바이오기술 등과 그 융합을 일컫는 것도 뭐 특별히 황당한 일은 아닐 수도 있다. 박근혜 정부가 똑같은 내용을 ‘창조경제’라 했다는 것은 지적해야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 최근에는 ‘혁신성장전략’으로 이름을 바꾼 이 정책들이 단지 ‘산업혁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다. 국민과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가져다줄 정책들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규제 완화와 민영화이고, 또 그 유관 노동정책들이 그것이다. 정부가 5월 22일 발표한 혁신성장전략의 하나인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도 대표적 사례이다.

우선 바이오헬스가 무엇인지부터 이야기해야겠다. 바이오헬스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흔히 떠올리는 것은 제약과 의료기기다. 그러나 정부가 말하는 바이오헬스 산업은 청와대의 친절한 설명에 따르면, “바이오헬스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조업뿐 아니라 “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산업 분야”다. 즉, 건강보험, 병원, 의료 등을 포함하는, 우리가 흔히 보건의료라고 부르는 분야이다.

따라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도 단순히 제약과 의료기기만을 포괄하는 전략이 아니다. 병원 민영화, 건강보험·민영의료보험과 직결되는 개인 질병 정보 상업화, 임상시험 규제 완화 등 보건의료 전반에 걸친 의료 민영화와 규제 완화 정책을 다 포괄한다. 이것은 2010년 8월 삼성경제연구소가 이명박 정부의 수의계약을 받아 내 작성한 보고서 ‘미래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의 최신 버전이기도 하다. 한 마디로 문재인 판 의료 민영화 전략의 결정판이라고 보면 될 듯하다.

의료 민영화

모든 부문을 한꺼번에 들여다보기는 힘드므로, 우선 ‘제약과 의료기기’ 분야부터 보자.

제약과 의료기기 분야는 일단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이다. 그런데 그 생산물이 항생제·항암제·백신 등 의약품이, 알약아이·초음파·심전도·투석기계 등 의료기기, 더 나아가 주사기·거즈 등이다. 사람에게 써야 하니 그 만큼 안전이 우선돼야 하고, 건강보험으로 구입해야 하니 그 만큼 비싸서도 안 된다.

그런데 이걸 산업화하는 것을 국가 목표로 삼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그 목표는 빨리 허가해 주고, 기업 입맛에 맞게 규제를 개선하고, 세금 혜택을 주고, 임상시험을 면제해 주고, 세금으로 연구개발비를 대주는 것 등등이다. 한 마디로 안전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국가의 지원으로 생산된 의약품과 의료기기가면 국민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게 당연할 듯한데, 자본주의에서 혁신성장은 그게 아니다. 비싸게 파는

상품으로 키워 5대 수출업종의 하나로 성장시키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산업혁신 전략은 여러 가지가 문제다.

첫째, 한국 바이오 산업의 실체다. 한 마디로 거품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 이 ‘바이오 버블’은 너무 심하게 증권가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됐다. 지난해 4월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한 보고서는 이렇게 지적한다. “현재의 중소형주 내의 바이오장세가 정당성을 가지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한국에서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고, “대표적인 글로벌 바이오시장의 인덱스인 NBI(나스닥 바이오 인덱스)는 지난 1년간 약 8.8퍼센트 상승했고, 올해는 -1.4퍼센트 하락한 상태”인데, “국내의 KRX 헬스케어 지수, 코스닥 제약지수는 지난 1년간 각각 96.5퍼센트, 123.3퍼센트 급등했다.” 한국 바이오 산업이 얼마나 거품이 많이 껴 있는지 알 수 있다.

둘째, 우리 나라 바이오 의약품의 실체는 어떠한가? 최근 드러난 인보사 사태가 그 실체다. 우선 인보사는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중증 암 치료제가 아니다. 세계 최초 유전자 치료제라고 하지만, 대체 치료제가 있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다. ‘700만 원짜리 진통제’일 뿐이다. 문제는 현재 개발 중인 바이오 의약품이 대부분 그렇다는 것이다.

바이오 의약품은 그 효용성도 매우 의심스럽다. 다시 인보사를 보자. 한 마디로 처음부터 사기였다. 연골세포라더니 실험실에서 쓴 종양 유발 세포의 변형 세포였다.(이조차 확실치 않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긴다. 그럼 그냥 국내에서나 팔았으면 되지 왜

까다로운 미국의 임상시험 승인을 통과하려 하다가 문제가 발각됐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보사는 환자들을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 주가 올리기용 상품이었던 때문이다. 모든 바이오 의약품 기업의 꿈은 미국·유럽·일본에서 임상시험을 거쳐 시판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 연구개발(R&D) 주력의 바이오기업 주가는 임상 한 단계 완료 시마다... 계단식으로 움직인다. 둘째, 주가 상승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단계는 임상 2상 완료 후 3상에 진입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국내 임상시험 단계마다 주가가 뛴다. 미국에서 하는 임상시험 승인 단계마다 주가가 폭등한다. 그런데 그 주가 상승액이 조 단위다. 수조 원이 넘는 돈을 벌 기회를 그냥 날려 버릴 것인가. 아니면 대박을 노리고 도박을 할 것인가. 인보사의 사기는 도박이었고, 몇십조 원에 해당하는 돈 잔치를 끝내고 그들이 떠난 폐허에는 강통을 찬 개미 투자자들과 종양이 뿜지도 모르는 수백만 원짜리 주사를 맞은 3700명의 환자가 남았다.

종양

현재 한국에서 허용된 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는 16개다. 이 중 효용성을 의심받는 의약품이 한두 개가 아니다. 아니, 이 중 미국에서 허용된 세포 치료제는 하나도 없다. 약인지 의심스러운 것이다.

한마디로, ‘바이오헬스’는 바이오 제약 산업에 관한 한, 특히 한국에서는 새로운 산업혁명이라기보다는 그냥 투기자본과 바이오 기업들에 의한 버블에 가깝다. 한국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전략은 이 버블을 더 키우고 여기에 세금을 1년에 4조 원이나 들이붓겠다는 거다.

자본주의는 ‘혁명’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그 ‘혁명’은 노동자와 민중을 위한 혁명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회관계 변형의 시도다. 더욱이 현대에 들어서 자본주의의 혁명은 금융자본주의적 부패와 투기자본의 한탕주의와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민중과 노동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크다. 그야말로 좀비 자본주의라 할 만하다. 지금 한국 바이오 ‘혁명’은 의약품이 더는 국민을 위한 약품으로서가 아니라, 환자는 어떻게 되든 말든 부패한 주식시장의 투기자본의 팔감으로만 쓰이는 상품이 돼 버리는 ‘혁명’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은 이것이 다가 아니다. 크게만 보아도 국민의 개인 질병 정보를 ‘건강정보 빅데이터’ 산업화라는 이름으로 기업이 가져다 쓰고, 대학병원을 기술지주회사로 더욱 영리화하고,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기업에 맡겨 결국 국민건강보험을 껌데기만 남게 하겠다는 것 등이 포함된다.(이것은 다음에 다루겠다.)

“지금이 우리에게 바이오헬스 세 계시장을 앞서갈 최적의 기회입니다. 우리 나라가 세계 최고가 된다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소망이 가장 먼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5월 23일 오송을 방문해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다. 도대체 우리 나라가 어디에서 세계 최고가 된다는 것이고, 누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인가.

※ 전문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유럽의회 선거

중도가 몰락하고 극우가 부상하다

찰리 킴버

영국 반자본주의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

5월 23~26일 열린 유럽의회 선거에서 수십 년 동안 유럽의회를 지배한 양대 “중도” 세력이 장악력을 잃었다.

중도 우파로 분류되는 정당들은 [전체 751석 중] 179석을 얻을 전망이다. 2014년의 216석보다 적은 수다. 중도 좌파 정당들의 의석 수도 191석에서 150석으로 줄 것이다.

[전 벨기에 총리이자] 중도 자유주의 그룹[유럽자유민주연합]의 지도자 허버트호프스타트는 이렇게 말했다. “전통적 양대 정당인 보수당과 시민당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들은 유럽의회 내 주요 직책을 차지하기 위해 녹색당 등과 동맹을 맺으려 할 것이다.

이는 유럽 전체 수준에서 중도 정치가 몰락한 결과다. 이런 현상은 이미 한 나라 수준에서는 뚜렷히 드러나곤 했으며 [유럽 수준] 이번 선거에서 더 강화됐다.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의 보수 연합과 독일사민당(SPD)의 “대연정”은 득표율이 45퍼센트에 못 미쳤다.

득표

30세 미만 청년층에서 현 총리 앙겔라 메르켈이 이끄는 보수 연합은 고작 13퍼센트를, 사민당은 10퍼센트를 득표했다. 반면 녹색당은 33퍼센트를 득표했다.

영국에서는 보수당과 노동당의 득표율을 더해도 23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2014년 선거에서 두 당이 득표한 82퍼센트에서 격감한 것이다.

프랑스의 유서 깊은 양당인 공화당과 사회당은 합쳐서 겨우 15퍼센트를 득표했다.

전통적 주류 정당들이 긴축 정책을 추진하며 무너져 내린 자리를 인종차별·극우 정당들이 메웠다. 프랑스의 나치 정당인 국민연합(옛 국민전선)은 현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신자유주의적 정당 ‘앙마르슈[전진당]를 꺾고 1위를 차지했다.

지난 몇 달 동안 마크롱은 노란 조끼 운동과 파업에 직면해 인기를 크게 잃었다. 국민연합 대표 마린 르펜은 마크롱에 대한 광범한 반감을 이용해, 마크롱을 끌어내릴 정당은 국민연합뿐이니 모두가 국민연합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파는 너무 취약해서 국민연합에

맞선 대안이 되지 못했다.

일부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일부 좌파 정당들이 노란 조끼 운동을 몇 달 동안 비난한 것 때문에, 많은 노란 조끼 시위 참가자들은 투표를 하지 않았다. 프랑스에서 투표에 불참한 유권자는 무려 2300만 명에 이른다. 투표 용지를 훼손하거나 백지 상태로 낸 일백만 명 중에도 노란 조끼 시위 참가자들이 꽤 있을 것이다.

이탈리아에서는 부총리이자 내무장관인 마테오 살비니가 이끄는 극우 정당 동맹당이 34퍼센트를 득표해 2014년의 6퍼센트보다 훨씬 높은 성적을 냈다. 동맹당이 이주민과 로마인[집시]에 대한 악성 캠페인을 벌인 후에 벌어진 일이다.

헝가리에서는 현 총리 빅토르 오르반이 이끄는 인종차별적 우익 정당 피데스당도 선거 승리를 거뒀다. 피데스당은 52퍼센트를 득표해, 헝가리에 할당된 21석 중 13석을 챙겼다. 오르반은 이번 선거를 두고 “이민자에 맞선 새 시대를 열었다”고 평했다.

저항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극우의 부상은 막을 수 없는 일이 아니다. 그리스의 나치 정당 황금새벽당은 2014년 선거에 비해 득표가 반토막났다. 그리스 활동가들이 황금새벽당 반대 운동을 끈질기게 벌여 황금새벽당의 살인 행각을 폭로한 덕이다.

헤이르트 빌데르스가 이끄는 네덜란드 극우 정당 자유당도 참패해 의석을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위한대안당(AfD)은 지난 선거에 비해 득표가 늘었지만 그들이 만족할 만큼은 아니었다.

스페인 극우 정당 ‘복스(Vox)’는 창당 이후 최초로 유럽의회 의석을 얻었지만, 득표율은 4월 총선에 비해 줄었다.

오스트리아 파시스트 정당 오스트리아자유당(FPO)은 대규모 부패 스캔들과 활기찬 반파시즘 운동 덕분에 득표율이 [2014년보다] 약 2퍼센트 감소했다. 득표를 하락폭이 더 크지 않았던 것은 그동안 자유당이 상당한 간부층과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광범한 지지층을 구축해 왔기 때문이다.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맞서 광범한 운동을 건설하고, 또한 긴축을 추진하는 중도 정당의 몰락에 대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 일들이 중요한 과제다.

의회 중심적 전략으로는 이런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 한때 급진적[좌파적 사회민주주의—역자] 정당이었지만 집권 후 긴축압력에 굴복한 그리스 시리자는 우파야당에 참패하고 조기 선거를 선언했다. 시리자 대표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이번 선거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임 투표라고 말한 바 있다.

스페인에서도 개혁주의 정당 포데모스가 주도하는 선거연합의 득표는 격감했다. 이 연합이 지지했던 바르셀로나 시장과 마드리드 시장은 연임에 실패했다.

인종차별과 긴축 모두에 맞선 저항과 투쟁이 우익을 저지하는 데에서 핵심이 될 것이다.



영국에서 1위를 차지한 브렉시트당의 지도자 나이절 패라지 이런 극우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중도 정치의 몰락에 대한 대안이 돼선 안 된다

영국

주류 정당들이 정치 위기로 참패하다

5월 23~26일 열린 유럽의회 선거 결과는 영국의 정치 위기와 보수당의 처참한 몰락을 훤히 드러냈다.

이는 일시적인 투표 현상이 아니다. 기성 정치 정반에 대한 심각한 반감이 표출된 것이다.

여당인 보수당의 득표율은 9퍼센트에 불과하다. 보수당에게는 전국 선거 사상 최악의 성적이자, 두 세기 이래 가장 나쁜 성적이다.

보수당은 5위를 했고 녹색당에게도 밀렸다. 총리 테리사 메이의 퇴진 선언으로 보수당 대표 경선이 시작되면 당내 분열은 훨씬 심각해질 것이다.

총리가 사임하고, 의회가 완전히 마비되고, 정부가 조롱거리가 되면 보통, 총선이 열린다.

지금도 바로 총선을 해야 마땅한데 보수당은 시간을 끌려고 할 것이다. 파멸할 것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5월 28일 외무장관 제러미 헌트는 지금 보수당이 브렉시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영국의 정당 체제가 파멸하고 우리 당[보수당]도 끝장날 것이다”고 말했다.

노동당도 보수당만큼은 심각하진 않아도 무시 못 할 위기에 처해 있다. 노동당은 14.6퍼센트를 득표해 유럽의회 의원 수가 반토막났다. 노동당

은 스코틀랜드에서는 단 한 석도 얻지 못했고, 웨일스에선 전국 선거 사상 처음으로 웨일스국민당에게 밀렸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의 지역구인 이슬링턴에서 노동당은 2위를 했지만, [노동당 강세 지역구인] 셰필드, 노리치, 브리스톨, 브라이턴앤드호브에서는 4위를 했다.

자유민주당은 21퍼센트, 녹색당은 12.5퍼센트를 득표했다. 우익 포퓰리즘 정당인 영국독립당(UKIP)과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노동당 탈당파] ‘체인지 UK’는 전멸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이 38퍼센트라는 압도적 득표율로 1위를 했다.

공동전선

노스웨스트잉글랜드 지역에선 인종차별 반대 운동이 축하할 만한 성과를 냈다. ‘인종차별에 맞서자’라는 공동전선의 운동 덕분에 파시스트인 토미 로빈슨이 낙선했다. 로빈슨은 고작 2퍼센트를 득표해 공탁금도 돌려받지 못했다.

영국 전체로 보아 이번 선거의 주요 수혜자는 극우 인종차별주의자 나이절 패라지의 브렉시트당이다. 브렉시트당은 3분의 1 가까이 득표했는데, 이는 보수당과 노동당의 표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다.

브렉시트당 투표자가 모두 인종차별주의자인 것은 아니다. 파시스트가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극우 인종차별주의자인 패라지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를 끌어모아 무슬림 혐오와 인종차별 쪽으로 돌린다.

브렉시트당의 이번 승리는 영국에서 인종차별적이고 우익적인 사상을 다시 강화할 것이다.

차기 당대표 자리를 노리는 보리스 존슨 등의 보수당 인사들은 브렉시트당의 승리를 보면서, 인종차별을 가미한 ‘노딜 브렉시트’ 협박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라는 확신을 더 굳힐 것이다.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이 합의된 것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것을 말한다—역자.]

그들은 그렇게 해야만 전 총리 테레사 메이가 남겨놓은 난파선에서 뒤흔들 수 있다고 여길 것이다.

영국에서 인종차별 우파의 득세에 분노하고 우려하는 사람들은 모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6월 4일 영국 방문을 규탄하는 런던 시위에 집중해야 한다.

영국 정치 위기가 커지는 만큼 투쟁을 키우는 것이 절실한 때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856호

번역 김준호·이원웅



사진 출처: Chatham House

코빈은 당내 우파에 타협해 왔지만 이제 더 큰 위기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영국 노동당의 초라한 성적과 코빈 당대표의 위기

닉 클라크

5월 23~26일 열린 유럽의회 선거에서 영국 노동당은 (여당인 보수당만큼은 아니지만) 초라한 성적을 거뒀다. 전국적으로 노동당은 1위인 브렉시트당과 2위인 자유민주당에 밀려 3위를 했다. 스코틀랜드에서 노동당은 10퍼센트 미만을 득표해 5위로 추락했다.

선거 결과가 당내 위기를 촉발한 가운데, 당내 우파가 당 대표 제러미 코빈에 도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노동당 우파는 압력에 밀린 노동당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다시 묻는] 2차 국민투표를 지지하고, 유럽연합 잔류 운동을 하기를 바란다.

2차 국민투표?

노동당의 공식 입장은 조기 총선 실시이지만, 조기 총선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2차 국민투표를 지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차 국민투표를 지지하는 당 부대표 톰 왓슨은 노동당의 유럽의회 선거 성적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 역자]에 대한 당의 입장을 이대로 뒤서는 총선에 입할 수 없다.”

코빈 자신과 여러 예비내각 성원도 이런 입장으로 후퇴했다. 5월 27일 코빈은 이렇게 말했다. “유럽연합과 합의를 해야 하고 그런 다음 국민 투표를 해야 한다.”

예비내각 재무장관 존 맥도널은 이렇게 말했다. “노동당은 국민투표로 [브렉시트] 문제를 국민에 되돌려줌으로써 노동당과 영국의 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예비내각 내무장관 다이앤 애보트 이런 입장

으로 후퇴했다.

다른 좌파 인사들은 더 노골적이었다. 유명한 코빈 지지자인 폴 메이슨은 <가디언> 칼럼에 이렇게 썼다. “노동당은 유럽연합에 잔류해 유럽연합을 개혁한다는 전략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 [한때 혁명이었던 메이슨은 개혁주의자가 돼 <포스트자본주의: 새로운 시작>(더퀘스트, 2017)을 출판했다 — 역자.]

메이슨은 본질적으로 이번 유럽의회 선거를 “쇠락한 공단”에 사는 우파 유권자와 “국체주의적이고 진보적인 정치”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경합으로 규정했다. 심지어 메이슨은 노동당의 2017년 총선 승리가 “크게 보면 유럽연합 잔류 지지 유권자들이 대거 전술적으로 노동당에 투표한” 덕분이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브렉시트 지지가 꼭 우파 지지를 뜻하지는 않는다. [유럽연합] 잔류파 정당 지지가 꼭 좌파적인 것은 아니듯이 말이다.

안타깝게도 좌파는 이 논쟁에서 스스로 존재감을 잃었다. 노동당 내 논쟁은 이주민들의 임금을 깎자는 사람들과 유럽연합을 살려야 한다는 사람들 사이의 경합이 됐다.

그동안 코빈은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점차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긴축과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좌파적 브렉시트 입장을 견지해야 우파에 맞서고 잘못된 분단선을 극복할 수 있다. 이주민 차별에 반대하고 국민보건서비스(NHS)와 복지를 지키는 것도 그런 전망의 일부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656호
번역 김준호·이원웅

수단 노동자들, 군부에 맞서 총파업에 나서다

찰리 김버

영국 반자본주의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

5월 28일 수단 전역에서 노동자들이 이를 총파업에 나섰다. 이 총파업은 군부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투쟁의 일환이다.

최초 보도에 따르면, 쾨나나 제당 공장과 센나르 제당 공장 노동자, 항만 노동자, 수도 하르툼에 있는 코버 공단 미숙련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동참했다.

보건 · 석유 · 핵발전 · 항공 · 은행 · 통신 부문의 노동자, 여러 정부 부처의 공무원 노동자, 금속 노동자, 대학 강사도 파업에 동참했다.

노동조합 연맹 수단직능인연합(SPA)는 지난 4월 독재자 오마르 알바시르를 퇴진시킨 전국적 항쟁을 몇 달간 주도적으로 조직했었다.

SPA는 이렇게 밝혔다. “온전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정치 총파업에 대거 참여할 것을 호소한다.

“정치 파업은 가장 효과적인 평화적 저항 수단의 하나다.

“[이번] 총파업의 목적은 수단 민중혁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아래로부터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최우선 목표는 [군부가] 정권을 민간 정부로 즉각 이양하게 하는 것이다.

“정치 파업은 오락가락하는 모든 입장과 태도를 정리할 단호한 혁명적 행동이다.”

SPA는 노동자들에게 출근은 하되 “조업을 일체 거부”하고 오후 집회에 참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발전

현재 수단의 사실상 최고 권력자인 “헤메티”(과도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무함마드 함단 다갈로의 별명)는 파업 참가자를 해고하겠다고 협박했지만, 노동자들은 굴하지 않았다.

항쟁이 총파업으로 발전하는 한편,



사진 출처: SPA

총파업에 동참한 제분소 노동자들 노동자들은 파업을 통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수도 하르툼의 국방부 청사와 전국 곳곳의 군부대 앞에서는 대중적 점거 시위도 계속되고 있다.

군부는 시위대를 걷어 내고 진압하려 애썼지만, 실패했다.

5월 24일에는 무함마드 제인이라는 시위 참가자가 13일에 일어난 진압 과정에서 입은 부상으로 목숨을 잃었다.

제인은 군부가 하르툼 광장 점거를 침탈하는 과정에서 소총 개머리판에 맞았다.

군부와 야당들은 3년 내 전면 재선거 실시 등 민정 이양과 관련해 일부 합의했다.

그러나 실질적 권력 기구인 통치위원회의 구성과 주도권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하지 못했다.

5월 하순에 군부 지도자들은 수단에 이웃한 반동적 국가들인 이집트 · 사우디아라비아 · 아랍에미르를 순방했다. 이들 세 나라 정부 모두 수단 군부 지지를 표명했다.

[이번 파업에] 노동자들이 대거 참가하면서 군부를 끌어내리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위해 부를 쓰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쟁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파업이 그저 협상 카드이거만 해서는 안 된다. 군부를 몰아내려면 총파업을 무기한으로 연장해야 한다.

권력에 도전하는 그런 총파업을 위해서는 사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노동자 평의회가 필요하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656호 / 번역 김준호

21세기 레닌주의

연사 이수현 (레닌 평전 2~4)(토니 클리프, 책갈피) 역자

5월 16일 레닌주의가 스탈린주의를 낳았는가?

장소: 충무아트센터 1층 컨벤션홀 (신당역 9번 출구)

5월 23일 레닌과 차별에 맞선 투쟁

장소: 충무아트센터 1층 컨벤션홀 (신당역 9번 출구)

5월 30일 레닌과 혁명적 당

장소: 유력종합사회복지관 9층 강당 (신당역 3번 출구) ※ 장소가 다릅니다.

6월 6일 오후 4시 《국가와 혁명》을 둘러싼 쟁점들

장소: 충무아트센터 1층 컨벤션홀 (신당역 9번 출구) ※ 시간이 다릅니다.

6월 13일 레닌의 제국주의론과 오늘날의 의의

장소: 충무아트센터 1층 컨벤션홀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 6월 6일(목)만 오후 4시
참가비 토론회당 4,000원 (학생 3,000원)
참가 문의 02-2271-2395, mail@workerssolidarity.org

문재인의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제출은 노동법 개악 선언이다

강동훈

5월 22일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단결권에 관한 ILO 핵심협약의 비준 동의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
그러자 주류 언론들은 정부가 기존의 '선 입법, 후비준'에서 입장을 바꿔 노동계의 '선 비준'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총 등 사용자들과 보수 언론들은 “노동자 단결권만 확대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 등에 이은 정부의 친노동 기조가 이어졌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이 정부 입장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경사노위에서 ILO 핵심협약에 관련한 합의안을 만들고 이를 통해 비준과 국회 입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는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어려우니 공을 골장 국회 논의로 넘겨 버리겠다는 것뿐이다.
이는 공수를 써서 노동계의 '선 비준' 요구를 벗어나고, 공을 국회로 돌려 비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은 ILO 핵심협약 비준·이행을 약속했다.
따라서 약속대로 ILO 핵심협약을 우

선 비준하고, 그에 맞게 법 개정을 추진하면 될 일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를 경사노위로 끌고 갔다. 정부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폐 등도 전혀 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문재인이 마땅히 해야 할 ILO 핵심협약 비준을 경사노위로 끌고 간 것은 불순한 목적이 있었다. '사회적 대화'라는 형식으로 노동자들에게 후퇴를 강요하려 한 것이다.

문재인은 이렇게 말했다. “국민들이 바라는 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 노동권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계가 협약 비준이라는 선물을 받는 만큼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대항권’ 요구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ILO 핵심협약의 취지는 노동3권 중 단결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에 대한 반대급부(사용자 '대항권')를 정부와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결권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처럼 노동조합의 기본권 사항을 노사간 거래의 대상으로 삼게 한 것 자체가 사용자들에게 유리한 일이다.

이제 공을 국회로 넘겨도 마찬가지다. 자한당의 반대가 뻔히 예상되는 국회로 비준 책임을 떠넘겼으니 더한층 개악하라고 먹이를 던져 준 것과 미한



정부의 안은 공을 국회로 넘겨 개악을 준비하는 것 3월 27일 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요구한 전국노동자대회

가지다.

ILO 핵심협약 관련 논의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다른 개혁 약속들을 무력화한 것과 완전한 판박이다. 가령,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하고는 자회사 전환과 직무급제 도입으로 비정규직 때와 다른없는 처우를 강요한 것.

-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최저임금제도 개악으로 무력화한 것.

한다면서 대신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추진해 다시 장시간 노동을 허용한 것.

- 경사노위를 개악 추진의 도구로 사용한 것(비록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지만),

사용자 요구 반영하려는 정부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은 이렇게 말했다. “지난 4월 15일 발표한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을 포함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

그러나 이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ILO 핵심협약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그냥 정부가 비준하고 법 개정을 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앞으로 더한층의 개악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경총은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장’ (이하 공익위원장)이 “노동계 입장에 편향된 인”이라며 반발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안에는 이미 사용자들의 요구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우선 공익위원안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있다. 노동자들이 변화하는 이해관계와 요구 사항을 둘러싼 투쟁과 교섭을 자주 하지 못하도록 제약하는 효과를 내는 개악이다. 게다가 교섭창구 단일화 때문에 단체교섭권을 박탈당한 소수노조의 경우, 더 오랫동안 단체교섭을 하지 못하게 된다.

사업장 점거파업 금지는 파업권을 크게 제약한다. 현재도 이미 주요 생산 시설 정기를 금지하고 있어 파업권이 제한되는 데 이를 더 강화하려는 것이다.

앞으로 논의에서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사용자들의 요구는 더욱 심한 개악들이다.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고용돼 있던 노동자에 의한 대체근로가 이미 가능하다. 그런데도 이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한다. 파업을 하나마나한 것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부당노동행위 처벌은 노동3권 침해 행위를 규제하는 것인데, 지금도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잘 되지 않는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조차 삭제한다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더욱 제여하기 힘들어진다.

한편 경사노위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해 ‘항후 모색’한다는 추상적인 결론만 내놓았다.

한술 더 떠, 자유한국당 의원 일미자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사용자의 요청만 있어도 단체행동을 봉쇄하고 파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사노위 공익위원 권고안	
ILO 핵심협약 비준	해직자·실직자 노조 가입 허용
	5급 이상 공무원 노조 가입 허용
	정부가 ‘노조 아님’ 통보 불가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항후 모색’	
이미 수용한 사용자 요구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2년 → 3년)
앞으로 논의할 사용자 요구	점거파업 금지
앞으로 논의할 사용자 요구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용자 요구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보장하겠다는 노동권도 제한투성이

물론 공익위원안에는 ILO 협약 비준을 위한 내용들도 포함돼 있다. 해직자·실직자의 노조 가입 허용, 5급 이상 공무원과 소방관의 노조 가입 허용, 정부가 ‘노조 아님’이라고 통보할 수 있는 권한 폐지 등이 있다.

그러나 사실상 정부안이라는 한정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노조법 안들을 보면, 여러 제한 조건을 달아서 여전히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사노위의 논의를 반영해 한정에 의원이 내놓은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대신에 ‘종사자가 아닌 조합

한정에 의원 안
사실상 정부 안이라는 한정에 의원 안은 노동기본권 보장에 온갖 제약을 두고 있다

개악

협상 기대 말고 투쟁에 전력해야

김명환 민주노총 지도부는 정부의 ILO 비준 방침 발표 직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를 ‘선 비준’으로 희망 섞어 해석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대구본부, 경북본부, 전북본부, 충북본부 등은 정부의 ILO 비준 방침을 골장 비판했다. 일부 연맹과 지역간부들이 김명환 집행부의 희망 섞인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노동운동 일각에서는 정부의 ILO 비

▶ 9면으로 이어짐

민주노총, 교섭전략특위 추진 않기로 하다

노동자들의 투쟁 의지를 일관되게 구현해야 한다

김하영 노동자연대 조직노동자운동 팀장, 운영위원
노동운동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 입법안을 9월까지 제시하기로 했으므로 민주노총이 이를 계기로 다시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정부 투쟁보다 입법안을 둘러싼 대화 참여에 힘을 기울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지난 5월 24일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에서 “교섭전략특위” 설치가 좌절된 것은 이런 제안이 조합원들의 정서와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 준다. 이 글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중앙위원회를 통해 “교섭전략특위”를 설치하려다 왜 자체 철회했는지 그 정치적 의미를 다루고 있다. 교섭전략특위는 노정, 노사정 및 대국회 교섭들을 추진하는 특별 기구로, 참여가 가로막힌 경사노위를 우회해 “새로운 경로의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려는 시도였다.

5월 24일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교섭전략특위” 설치가 논란이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의 직전 김명환 위원장이 안전 상정을 철회하면서, 교섭전략특위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회의 인사발에서 이렇게 밝혔다. “교섭전략특위 위상과 운영, 정세적 판단에 관해 이견들이 있었다.” “교섭전략특위 안전을 취소하겠다.”

김명환 위원장이 안전 상정을 철회한 것은 잘한 일이다.

사실 김명환 위원장은 지난 5월 16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상당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섭전략특위 설치 안전을 중앙위에서 상정하겠다고 고집했었다.

그런 김 위원장이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는 교섭전략특위 설치에 대한 반대가 급속히 확산됐기 때문이다.

좌파 정치단체와 노조활동가 조직들은 교섭전략특위 설치에 반대하는 공

동 입장을 냈다. 이들은 민주노총 집행부가 “경사노위를 우회해 새로운 경로의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섭를 추진이 아니라 총파업 실질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정기대의 인사발회를 앞두고도 경사노위 참여 반대 운동을 주도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ILO 비준-입법 동시에 추진 입장을 발표한 것도 민주노총 좌파의 불만을 자극했다. 김명환 집행부는 정부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성명을 냈고, <한겨레>와 <경향> 등은 이를 매우 우호적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이와 사뭇 다르게 민주노총 가맹지단 인사조직들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법 개악을 예고한 것이라는 규탄이 터져나왔다.

김명환 집행부는 지금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 추진 의제를 다시 꺼내놓기에 좋은 때라고 봤던 듯하다. 국회 마비로 노동개악이 중단된 듯하고 패스트

트랙 지정 이후 정부·여당이 우파에 진지하게 맞서는 듯하다고 일반적으로 보면서 말이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정서는 그렇지 않음이 드러났다. 총파업 태세를 갖춰 두 모자란 판국에 김명환 집행부가 문재인 정부와의 대화 추진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을 많은 조합원들이 못마땅하게 여긴 것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교섭전략특위 설치 안전을 상정하면 논란만 불거지고 상정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경사노위 참여를 둘러싸고 두 번이나 좌절을 경험했으니 더욱 조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교섭전략특위 설치 안전을 철회한 만큼, 이제 교섭이 아니라 총파업 실질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것이 이번 중앙위원회 회의 결과(교섭전략특위 추진 철회)의 원인이 된 조합원들의 정서이고 명령이다.

▶ 8면에서 이어짐
준 방침을 계기로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명환 민주노총 집행부가 중앙위에서 통과시키려던 교섭전략특위는 결국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경사노위에서 개혁을 얻어 낼 수 있다는 전망이 이미 실패했는데도 여전히 정부와의 교섭을 마련에 힘을 쏟는 것은 투쟁 준비를 분산·약화시키는 효과를 낸다. 그동안에도 김명환 지도부는 ILO 협약 선 비준을 주장하면서도 실천에서는 무원노조에게는 규약 시정을 받아 내고 서야 노조로 인정했다. 서울시도 대리를 원노조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에 규약 개정을 요구했다. 이처럼 노동법 개악 의지가 확고한 문재인 정부와 사용자 측은 사회적 대화로 설득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하다. 따라서 재차 확인된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 추진 계획 앞에서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7월 파업 실질화 등 진정한 총력투쟁의 조직에 매진해야 할 때다.

정의당, 민중당 논평에 대한 논평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정부 발표가 ‘선 비준 후 입법’을 채택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면서도 행정명령으로 가능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로 말고 행동을 일차시키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ILO 핵심협약 비준 책임을 자한당에 떠넘기며 조속한 국회 비준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정미 의원 스스로 잘 폭로했듯이, 정부는 이미 법률 개정 전에 국회비준 동의를 처리한 사실이 있는 데도 비준과 법 개정을 함께 해야 한다

▶ 9면으로 이어짐

민중당도 비슷한 입장을 내놓았다. “관련 입법을 먼저하고 나중에 비준하겠다는 입장을 바꾼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면서 “당장 국회에 제출하면 될 일을 각계의 의견을 들어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 것은 유감”이라거나, 노동개악 시도를 경계하거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등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과 민중당은 모두 ILO 핵심협약 비준 방침이 “개악을 위한 눈속임”이며 문재인이 노동 개악 의지가 확고

하다고 경고하지는 않고 있다.

이는 양당 모두 우파의 공세에 맞서 민주당과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듯하다. 특히, 정의당은 국회 의로 넘어오면 자신의 구실이 더 커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듯도 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자한당이나 사용자들과 함께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기대를 걸도록 이끌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 정당이라면 우파에 반대하면 서도 노동자 투쟁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변화·미세먼지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사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대중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자기결정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우리는 모든 난민을 억류 상태에서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살 권리를 위해 투쟁한다. 특히, 우리는 거기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이 법은 ‘북한의 위협’과는 큰 관계가 없고 오히려 남한 내 정치적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마녀사냥용으로 권력층이 종종 사용하는 무기이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을 위한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체제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때,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대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의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혁명적 조직은 노동조합 운동으로부터 생겨나 세워질 수 없고, 오히려 자본주의에 혁명적으로 반대하는 소수노동자뿐 아니라 청년·학생도 포함됨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이라는 수단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점검하고,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성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효과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어떤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 합시다.

우리는 어떤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 합시다.

6·1 서울 퀴어퍼레이드

성소수자 혐오 부추기는 황교안, 여전히 “나중에”라는 문재인

양효영

6월 1일 서울시장 광장에서 스무 번째 퀴어퍼레이드(성소수자 자긍심 행진)가 열린다. 올해는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의 기원이 된 미국의 급진적 성소수자 투쟁 ‘스톤월 항쟁’ 5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하다.

올해도 기독교 우파들은 퀴어퍼레이드를 훼방 놓기 위해 열심이다. 반동성에 단체들은 이번에도 퀴어퍼레이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가처분 심의를 하는 판사가 점잖게 꼬집었듯이 퀴어퍼레이드가 보기 싫으면 자신들이 안 나오면 될 일이다.

퀴어퍼레이드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건 근거가 없지만, 성소수자 혐오가 성소수자 아동·청소년을 극단적 선택까지 이르게 할 만큼 해악적이라는 건 명백하다.

서울시 기독 공무원 17명이 ‘다수 공무원이 축제에 반대한다’며 비난 성명을 냈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조합원 약 1만 5000명)는 퀴어퍼레이드 장소에 지지 현수막을 부착하기로 결정했다.

기독교 우익의 진정한 속셈은 출산을 저하나 가족 위기 등 일부 사회 문제의 책임을 애먼 성소수자들에게 돌리고, 자신들의 비리 부패, 성적 추문 등을 가리려는 것이다. 이에 편승해 황교안과 자한당도 우파 결집에 퀴어퍼레이드 비난을 이용하고 있다.

5월 17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세종시에서 열린 한 간담회에서 동

성애와 퀴어문화축제를 비난했다(공교롭게도 이날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이었다).

“가족 가치”

그는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축제들이 십수 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가족의 아름다운 가치”를 지켜야 한다며 “개인적, 정치적으로 동성애에 반대한다”고도 했다.

전형적인 집토끼 관리 포석이다. 보수적 “가족 가치”를 앞세워 우파층의 불안감을 자극해 보려는 것이다. 특히 기독교 우익을 겨냥한 행보일 것이다. 황교안은 최근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가서 합장을 거부할 정도로 독실한 보수 기독교 장로임을 자처한다.(비록 보름이 지난 뒤에서야 몰랐다면 사과했지만 말이다.)

물론 우파의 박원순 서울시장의 광장 사용 허가 비난에 합세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 힘을 실어 차기 대선 경쟁자를 견제하는 효과도 얻어 보고 싶은 듯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축제”라는 황교안의 말과 달리 퀴어퍼레이드 규모는 매해 커져 왔다. 2000년 대학로에서 50명으로 시작한 퀴어퍼레이드는 지난해 5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중적 행사로 크게 성장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일상에서 숨죽이고 살아야 하는 많은 성소수자들이 하루라도 숨통을 트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행사가 됐다.

성소수자에 대한 우호적 인식도 확산돼 왔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



김민우

364일도 숨통 트이도록 대규모 행진의 자신감은 일상의 차별에 맞선 자양분이 돼야 한다

한 ‘2018 사회통합실태조사’를 보면, ‘동성애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배제 여론은 2013년 62.1퍼센트에서, 2018년 49퍼센트로 10퍼센트 이상 낮아졌다.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은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이다. 포용 추세는 20~30대에서 훨씬 빠르다.

성소수자 차별 유지하는 문재인

한편 우파처럼 노골적 혐오를 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성소수자들 상당수가 현 정부를 지지했을 법하다. 그러나 현 정부도 성소수자들을 위해 한 일은 없다.

문재인은 대선 때부터 ‘동성애에 반대한다’며 냉담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은 보수 기독교 단체 행사에 가서 동성애 반대

를 선언했다.

전 국방부 장관 송영무는 군대 내 동성 간 합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 6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런 상황에서 올해 또다시 해군 내 성소수자 색출이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도 무시하고 있다.

성소수자들의 집회 시위도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퀴어퍼레이드를 우파들이 물리력으로 행진을 막았는데, 민주당 소속 인천시 동구청장이 장소를 불허해 우익들의 기세를 올리는 데 한몫했다.

민주당 전반으로 보면, 지난 10여년 동안 성소수자 쟁점에서 우파의 눈치를 봐 왔다.

얼마 전 경남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도의회와 교육위에서 과반수를 차

지하고 있음에도 학생인권조례안 본회의 상정이 부결된 일은 최신 사례다.

정부와 여당의 이런 행태는 우파의 자신감과 영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성소수자 차별 해소를 위해 정부와 민주당에 기댈 수 없다.

한편, 정의당, 민중당 등 진보정당들이 성소수자를 방어하며 퀴어퍼레이드에 참가해 온 건 좋은 일이다.

성소수자 혐오적 우파들이 대세가 아님을 보여 주기 위해, 또한 차별을 유지시키며 우파들 사기만 높여 주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퀴어퍼레이드에 성소수자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수만 명이 자신감 있게 행진하자.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군형법 92조 6, 대학 내 성소수자 차별, 트랜스젠더 천대 등 성소수자들을 둘러싼 수많은 억압에도 맞서 싸워야 한다.

제국주의와 다국적 기업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

올해 퀴어문화축제에도 구글, 에어비엔비, 러쉬 등 다국적 기업들이 참가한다. 또한 대사관 10곳이 부스를 배정받았다. 퀴어퍼레이드 사전행사인 서울핑크캣 행사에는 주한 미국대사관, 영국대사관이 부스를 배정받았다.

기독교 우파들은 지난해에 이어 미 대사관이 대사관 건물에 무지개 깃발을 내건 것에 반발하고 있다. 강성 친미 우파 입장에서선 미국의 친성소수자 제스처가 난감하게 느껴질 것이다.

이 때문에 성소수자 운동 일부는 미 대사관의 참가를 우파의 비난과 반대를 희석해 줄 방벽처럼 여기곤 한다.

하지만 미대사관의 퀴어퍼레이드 참가는 전 세계에서 자신들이 벌이는 제국주의 전쟁과 끔찍한 악행을 가리려는 ‘핑크워싱’*이다. 지금 미국은 이란에 전쟁 위협을 하고, 다시금 대북 압박을 하며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심지어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당선

이후 끊임없이 성소수자 권리를 공격했다. 최근엔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다국적 기업들에게도 ‘핑크워싱’은 자신들의 착취와 부패를 가리고 손쉽게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진다. 성소수자를 겨냥한 상품들을 판매해 이윤을 벌어들일 기회로도 본다(핑크머니).

성소수자 운동이 이런 핑크워싱을 수용하면 제국주의 국가·다국적 기업과 한편으로 보이기 십상이다. 또한 성소수자 운동이 착취와 억압에 무뎌지게 만든다.

무엇보다 제국주의 국가·다국적 기업의 횡포에 고통 받는 피억압 민중과의 연대가 훼손될 수 있다. 이는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쟁취하는 데에도 해악적이다.

올해 퀴어문화축제조직위(이하 조직위)가 대리모 알선 사업을 하는 기업(블루드)의 후원을 받았던 것도 이런

문제를 보여 준다.

여성의 신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기업 후원을 철회하라는 항의들이 있었고, 결국 조직위는 이 기업의 후원을 받는 것을 철회했다.

물론 대리모를 하게 된 개개인을 비난할 순 없다. 이들은 대체로 자신의 몸이라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빈곤한 제3세계 여성인 경우가 많다. 비상업적으로 이뤄지는 대리모 행위에 대해서도 비난하긴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대리모 알선 기업들은 여성들의 신체를 이용해 이윤을 벌어들이고, 이윤 증대를 위해 대리모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 등을 강요하며 여성을 착취한다.

그런데 조직위는 이런 기업에게는 부스를 배정한 반면(항의에 직면해 철회하긴 했지만),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조합 부스들은 전원 탈락시켰다.

조직위 측은 나름의 기준을 통해 선정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애초에 기준 자체가 기업과 대사관 우대적이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는 3년 전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의 핑크워싱 동조를 비판한 좌파 노동단체인 노동자연대의 부스를 영동하게도 정치적 이견을 빌미로 석연찮게 취소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이미 예고된 일이다.

성소수자 해방을 바라는 사람들은 제국주의 국가와 다국적 기업에도 반대해야 한다.

용어 설명

핑크워싱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점령과 학살로 인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몰타기 하려고 성소수자 친화적 이미지를 내세운 것을 가리키는 말.
오늘날에는 제국주의 국가들과 다국적 기업이 일부 성소수자 단체를 지원하고 포섭함으로써 자신들의 악행을 가리려는 일체의 행위를 비판하는 말로 쓰인다.

[추천 책]

동성애 혐오의 원인과 해방의 전망

해방의 전망

마크스주의의 분석

노라 칼린 외 지음, 10,000원, 책갈피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

로라 마일스 외 지음, 9,000원, 책갈피

무지개 속 적색

성소수자 해방과 사회변혁

해나 디 지음, 12,000원, 책갈피

계속되는 집배원 과로사에도 인력충원 없다는 냉혈한 정부와 우정본부

신정환

최근 연이은 집배원 사망 소식과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의 노동조건 공격에, 장시간·중노동에 시달려온 집배원들의 분노와 항의가 커지고 있다.

공주우체국 상시계약(무기계약직) 집배원 이은장 씨의 죽음은 과로와 무료노동이 일상이 된 집배원의 현실을 비극적으로 드러냈다.

그런데도 공주우체국 관리자들은 이은장 씨의 죽음은 업무와 무관하다며 과로사가 아니라고 발뺌했다. 5월 20일 분노한 유가족과 집배원 동료들, 고인의 배달구역 주민들이 순직 인정을 요구하며 공주우체국 규탄 집회에 참가했다(공공운수노조와 전국집배노조 주최). 공주우체국장은 유족에게 사과했고, 순직 인정을 위한 자료 협조 등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간 집배원 191명이 숨졌다. 인건비 절감과 '경영 효율화' 정책이 낳은 기업 살인이다.

그런데도 우정본부는 지난해 우편사업 적자가 최대였다고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 짜겠다고 한다.

지난해 우정본부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인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하 기획추진단)에서 합의한 사항도 우정본부는 무시하고 있다. 집배원 2000명 증원(올해 1000명 증원)을 무기한 보류한 것이다.

또, 우정본부는 교섭대표노조인 전국우정노조(한국노총)와 올해 7월 1일부터 토요일배달을 폐지하겠다고 합의



배달 구역은 늘고 노동 강도는 세지는데 인력 충원은 요원. 이 죽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했는데, 이것도 지키지 않겠다고 한다. 평일 하루 10시간가량 일하는 집배원들은 주말에 쉬기를 간절히 바란다. 과로사를 막으려면 토요일 배달은 즉각 폐지해야 한다.

약속 파기

우정본부는 토요일배달 폐지 대신 폼수 방안을 내놔다. 통상우편물 배달과 택배 배달 구역을 분리하는 배달 이원화로 집배원의 노동강도를 줄여 주겠

다고 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인력충원 없이 이렇게 되면 집배원 1명 당 배달 구역만 늘어나 노동시간은 늘어나고 노동강도는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한다.

또 택배 물량 증가로 집배원들의 업무량은 더 늘어나고 있는데, 우정본부는 인력 증원은커녕 시간외근무를 월 22시간 이하로 제한하겠다고 한다(현재 월 평균 시간외근무는 50시간). 집배원들에게 정해진 시간 내에 노동강도를

높여 일을 마치든, 못 다한 일은 무료노동을 하든,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정부는 눈감고 있다. 청와대가 나서 만든 기획추진단이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권고안을 발표한 지 7개월이 지나고도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지만 문재인 정부는 수수방관 중이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며 시간을 끌고는 정부 책임은 회피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우정본부의 약속 파기와

노동조건 공격, 이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기층 집배원들의 불만과 항의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집배노조는 7월부터 토요일배달을 전면 거부하고 7월 6일 토요일에 전국 집중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집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철폐 및 과로사·자살방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도 5월 30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활동을 재개한다.

그간 투쟁에 소극적이었던 우정노조도 항의에 나섰다. 우정노조는 최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지방본부 별 순회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26일 부산과 27일 대구에서 열린 집회에 각각 2700여 명과 1500여 명이나 참가했다(우정노조 발표). 우정노조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살인적인 노동조건을 이번만큼은 개선해야 한다는 열망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층 노동자들의 불만이 워낙 크다 보니 우정본부의 공격에 맞서 집배노조와 우정노조가 같이 싸워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다. 그간 집배노조 지부들은 우체국 앞에서 출근 홍보전을 해 왔는데, 최근엔 우정노조 지부들도 출근 홍보전을 시작했다. 일부 우체국에선 집배노조와 우정노조 조합원들이 같이 진행하기도 했다.

우정본부는 돈이 없다며 인력 증원과 토요일배달 폐지에 '배 짜러'는 식으로 나온다. 그러나 우정본부는 매년 수천억 원씩 흑자를 냈으며, 그간의 흑자액 중 무려 2조 8000억 원을 정부가 가져갔다. 약속을 파기한 우정본부에 맞서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에게도 책임을 지라고 압박할 수 있다.

대북 식량지원의 적기 지나가는데

정부는 언제쯤 쌀을 보내려는가?

김영익

문재인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 원칙을 밝힌 지 시일이 꽤 지났다. 그러나 지원이 언제 이뤄질지 여전히 불확실하다.

5월 20일 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유니세프 대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돈은 북한 아동·임산부 영양 지원과 모자보건 사업에 쓰인다.

그러나 북한 인구 40퍼센트가 영양 부족 상태임을 감안하면, 매우 부족하다. 무엇보다,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 지원은 북한 사람들에게 닿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북한에서 5~9월이 식량이 가장 부족한 시기임을 감안하면, 늦은 지원이 될 수 있다.

통일부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해] 구체적인 [식량] 지원계획을 검토"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북 식량 지원을 '북한 퍼주기'라고 비난하는 우파들까지 아울러서 여론을 청취하는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의견 수렴 자체가 쉽지 않다.

연동

북한 당국은 문재인 정부의 식량지원 원칙에 화답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식량 지원 문제가 주요 정치·군사적 의제와 연동돼 있기 때문일 것이다.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북·미/남·북 대화에 속도를 내는 방안으로 한·미 당국들이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과거 북핵 협상 과정을 돌아보면, 인도적 지원 문제는 정치·군사적 의제와 얽혀서 협상 테이블 위에서 논의되

왔다. 예컨대, 북한이 대북 사찰 등을 수용하는 대신에 미국이 대북 식량 지원을 약속하는 식이었다.

그래서 북한이 남한의 대화 제안에 선포 응하지 않는 듯하다. 이로써 식량난의 주요 원인인 제재는 풀지 않은 채 식량 지원 카드를 꺼낸 미국·남한에게 불만을 드러내는 셈이다.

대북 식량 지원은 북핵 협상과 무관하게 이뤄져야 한다. 식량 지원은 북한 정부나 지배 관료들이 아니라 평범한 노동자·서민에 대한 지원이다. 평양에 살며 사넬 같은 수입 사치품을 부담 없이 구입하고 술자리에서 1000달러 정도는 예사로 쓰는 지배자들에게 식량난은 남의 일이다. 그러나 북한 노동자에게 식량난은 생존의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구체적인 대북 식량 지원 방안을 무조건 즉시 내놔야 한다.

19년째 열리는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마르크시즘
8월 22일(목) ~ 25일(일)
2019
장소 : 서울
주최 : 노동자연대

★ 19년 전통의 포럼 ★ 70여 개 주제

★ 차별, 불평등, 착취에 반대하는 토론

★ 마르크스주의를 쉽게 배울 기회

참가 신청하기

marxism.or.kr



02-2271-2395, 010-4909-2026 | marxism@marxism.or.kr | marxism.or.kr

역사를 기억하며 1989년 현대중공업 128일 파업

노동자 투쟁이 (학생의 지지와 함께) 정치적이 되던 때

김인식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법인 분할에 반대하는 투쟁을 하고 있는 이때, 30년 전인 1989년 128일 파업의 의미와 교훈을 새겨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1989년 봄 울산에서는 거리 행진과 시가전들이 연일 벌어졌다. 3월 30일 경찰 병력 1만 5000명이 육·해·공 모두에서 현대중공업 파업 노동자들을 공격했다(작전명 '아침이슬'). 이에 맞서 노동자들뿐 아니라 전국에서 모여든 대학생들까지 거리 전투에 참가했다. 여러 모로 '제2의 광주'를 방불케 했다.

1987년 이후 최고조에 이른 두 강력한 운동 — 노동운동과 학생운동 — 이 연대했다. 노동자 가족들은 대책위를 만들어 시위대에게 주먹밥을 제공했다.

힘을 자각한 노동자들

현대중공업 128일 파업은 1988년 12월 12일 시작해 1989년 4월 18일까지 이어졌다.

노동자들은 단체협약 체결(상여금 지급과 수당 인상, 토요일 오전 근무 등)과 해고자 4명의 복직을 요구했다.

노동자들은 현대그룹의 부를 늘려주느라 20여 년간 배 밑바닥에서 용접을 하다 질식해 죽고, 불에 타서 죽고, 떨어져서 죽고, 다쳐서 불구가 됐다.

그런 노동자들이 1987년 7~8월 노동자 대파업 투쟁을 체험하며 자신들의 힘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하늘 같기만 하던 회사 간부와 관리자들이 찢궂었다. 노동자들의 삶에 눈길 한 번 안주던 TV·라디오·신문이 매일 노동자 투쟁을 다루며 미주알고주알 걱정하는 것을 봤다.

대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친사측 노조 집행부를 대체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오좌복 독신자 숙소가 주요 근거지였다. 이곳에서 노동자들은 토론하고, 다른 현대그룹 계열사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모색했다.

오좌복 숙소에서 시작된 투쟁 불씨가 사업장 안으로 번져갔다. 현대중공업 사업장 내 비공식 그룹인 '선봉'이 발행한 유인물 <선봉>이 나오는 날이면 사업장 전체가 술렁거렸다. 당시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친사측이 통제하고 있었다.

1988년 11월 13일 개최된 전국노동



1989년 3월 12일 연세대에서 열린 '현대 재벌 폭력 규탄 국민대회' 현대중공업 조합원들이 사측의 식칼 테러 만행 사진을 들고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자대회도 현대중공업 민주파 활동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노동자 3만여 명이 참가해 노동법 개정을 요구했다. 현대중공업 참가자들은 단결의 위력과 전국적 노동자 연대의 필요성을 느꼈다.

마침내 12월 12일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했다. 전체 조합원 1만 8693명 중 1만 3425명(71퍼센트)이 파업에 찬성했다.

친사측 성향의 노조 위원장 서태수는 조합원들의 열기에 떠밀려 파업을 선언했다. 서태수는 3일 만에 사측 안(생산장려금 12만 원, 수당 1만 원 인상)을 찬반 투표에 붙이려 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투표 자체를 거부했다. 그러자 서태수는 12월 18일 회사 측과 일방적으로 정상 조업에 합의하고 잠적했다. 서태수는 현대중공업 근처 산수장여관에 사무실을 차리고 안전기획부(안기부), 울산경찰서, 친사측 대의원 등과 함께 파업 분쇄 음모를 꾸몄다. 이 자리에 당시 현대그룹 총수 정주영이 고용한 제임스 리가 있었다. 이자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노조 파괴 전문가였다. 요즘 악명 높은 노조 파괴 전문업체 창조건설팅의 원조 격이라 할 수 있다.

12월 20일 '이원건 권한대행 체제 인정 및 쟁의 계속 여부' 투표에서 조합원 1만 71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 며칠은 노동자 파업의 역동성을 잘 보여 줬다. 파업 투쟁을 둘러싼 다양한 입장들이 등장해 대립하다 하루 만에 사라지곤 했다.

이렇게 골리앗의 사슬이 끊어졌다. 골리앗(크레인)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세웠지만, 그와 동시에 현대그룹의 착취와 억압의 상징이었다.

노동자 투쟁이 기세등등해지는 것이 두려워, 당시 대통령 노태우와 정주영은 노동자들의 요구에 매우 강경하

게 대응했다.

정주영은 파업에 밀리면 자신의 통제력이 건잡을 수 없이 약화될 것을 우려했다. 그래서 어떻게든 노동자들의 기세를 꺾고자 했다. 정주영에게 노태우 정부는 든든한 원군이였다.

노태우는 1987년 6·29 선언 이후 '보통 사람의 시대'라는 가면을 쓰고 등장했다. 노태우는 1988년 취임 첫해부터 노동자 투쟁이 격화하자 위기 의식을 느꼈다. 유화적 제스처만으로는 노동자 투쟁을 달랠 수 없게 되자 채찍을 더 세게 휘둘렀다. 1988년 12월 28일 노태우는 체제 수호를 다짐하며 '민생 치안의 확립을 위한 특별 지시'를 발표했다. 탄압을 전문화('공안정국'이라고 불리었다)하겠다는 선언 포고였다.

파업의 정치화

1989년 1월 8일 새벽, 현중 사측이 동원한 폭력배 40여 명이 현대그룹해고근로자복지실천협의회 사무실 등을 급습해 노동자들을 폭행했다. 노태우 정부가 풍산금속과 모토로라 농성 노동자들을 강경 진압한 직후에 벌어진 일이었다.

파업 노동자들은 시내로 행진하며 폭력 테러 만행을 규탄했다. 1월 28일 파업 노동자 7000여 명이 일산해수욕장까지 거리 행진을 했다.

언론의 편파·왜곡 보도도 노동자들을 분노케 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대규모 거리 행진을 통해 파업 투쟁의 정당성을 다른 노동자들에게 알리고자 했다. 투쟁은 정치화하기 시작했다.

1·8 폭력 테러는 노동자 연대가 확대(정치투쟁)되는 계기가 됐다. 1월 15일 태화강 고수부지에서 '노동운동 탄압 분쇄 및 테러 만행 규탄 전국노동자대회'가 개최됐다. 전국에서 노동자 3만 명이 참가했다.

설 연휴가 다가오자 현대그룹은 파업

노동자들의 경제적 곤궁함을 파고들었다. 설 상여금 160만 원(당시로서 큰 돈이었다)을 지급하겠다고 미끼를 던졌다. 또, 일방적 조업 재개를 발표하고 조업에 참가하는 조합원들에게만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사측의 조업 재개 방침은 파업 노동자들에게 빼앗긴 작업장을 탈환하겠다는 의도였다.

파업 노동자들은 "미꾸라지 소탕 작전"에 돌입했다. 파업 투쟁의 전열을 내부로부터 무너뜨리는 것은 배신 행위였기 때문이다. 2월 11일부터 파업 노동자들은 각 정문들을 봉쇄해 대체 인력의 출입을 막았다.

그러자 2월 21일 회사 측의 사주와 지휘를 받는 노골적인 파업파괴자들인 '구사대' 2000여 명이 회사 정문 앞에서 평화 시위를 하고 있는 파업 노동자들을 식칼로 찌르고,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두들겨 패는 '식칼 테러 만행'을 저질렀다. 경찰 병력 수천명이 이를 지켜보고만 있었다.

3월 12일 연세대에서 '현대 재벌 폭력 테러 규탄 국민대회'가 열렸다. 노동자와 학생 7000여 명이 집회 후 신촌 거리로 진출해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노태우 정부는 경찰력 투입을 본격 준비해 나갔다. "2000여 명이 집단 농성 중인 회사 안에 화염병, 중장비 등이 많아 경찰을 투입하여 진압하기 위해서는 80개 중대의 1만여 명의 병력이 필요[하다.]"

경찰력 투입이 임박하자 파업 노동자들은 중장비와 부품 등을 동원해 현대중공업 정문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정당방위를 위해 무장하기 시작했다. 최후까지 파업을 지키려는 파업 노동자들이 속속 바리케이드로 집결했다.

학생들도 연대 행동을 조직했다. 대구·영남 지역 학생들은 모금 운동을 해, 300만 원을 노동조합에 전달했다. 그리고 "만약 공권력이 개입한다면 화염병과 쥘돌을 들고 전국의 현대 건물

을 박살내겠다"고 약속했다.

3월 25일 부산 지역 11개 대학 대표자 300여 명이 현대중공업 파업 투쟁 지지 집회를 개최했다. 3월 26일에는 광주·전남 지역 대학생 400여 명이 현대중공업 파업 지지 울산 방문 출정식을 가졌다.

3월 30일 경찰 병력 1만 5000명이 현대중공업에 투입됐다. 그 직전에 문익환 목사(1994년 작고)가 방북하자, 노태우 정부는 그 일을 빌미 삼아 진압 작전을 개시했다.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울산 동구 곳곳에서 격렬하게 시가전을 벌였다.

결국 1989년 4월 18일 현대중공업 노조 지도부는 정상 조업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장 조합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서로 자진 출두했다. 총 53명의 구속자와 55명의 해고자가 발생한 128일 파업은 가공할 국가 폭력과 사용자 측 테러에 의해 중단됐다.

그러나 128일 파업이 단순히 패배한 것은 아니다. 그 뒤 노조 지도부 선거에서 더 투쟁적인 집행부가 등장했고, 그해 8월 10일 구속자 석방과 해고자 복직에 관한 합의서를 정취했다.

128일 파업은 1987년 7~8월 대파업 투쟁으로 고무된 노동자들이 자신의 작업장과 거리에서 벌인 투쟁들 중 가장 멀리 나아간 투쟁이었다. 정부와 사용자가 함세해 무지막지한 폭력으로 강경 대응한 이유였다. 그러나 이에 맞서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연대를 구축하면서 투쟁의 정치화를 촉진시켰다.

현대중공업 128일 파업은 엥겔스의 유명한 말을 실현할 잠재력이 노동자들에게 있음을 보여 준 엄강 총만한 투쟁이었다. "단 한 명의 부르주아를 굴복시키기 위해 그토록 오래 견디는 노동자들은 전체 부르주아지의 권력을 전복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력 투입에 맞서 저항하는 노동자들

사진 출처: 서희사(전민연구소)

현대차

대량 징계 철회시키고 현장 통제 막아 내자

정동석 현대차지부 현장위원

5월 8일 현대차 사측이 울산 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근무질서 확립” 지침을 내렸다. ‘두 작업’ 등 “변칙근무”, “근무 중 사적 행위” 등을 적발해 징계하겠다고 한다. (관련 기사: 본지 285호 “두 작업” 통제하려는 현대차 사측 — 더한 층의 노동 강도 강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사측은 지침을 내리고 하루 만에 ‘두 작업’을 했다는 이유로 4공장 조합원 36명을 징계(감봉)했다. 이처럼 하루 만에 징계가 내려진 것은 사측이 미리 공격을 준비했음을 보여 준다.

4공장 징계 이후 3공장에서도 2명이 비슷한 이유로 감봉을 당했다. 그리고 다른 공장들에서도 현장 통제가 강화됐다.

십수 년 동안 조합원들이 아무 문제 없이 해 온 ‘두 작업’을 갑자기 징계한 것이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았다. 이 속에서 처음에는 조용히 있던 4공장 대의원과 현장위원회가 현장 통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대의원 대표 등은 4공장 사측을 찾아가 항의했고, 특근 거부도 할 수 있다고 내비쳤다고 한다.

5월 17일에는 이런 반발 속에 일부

라인이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그리고 조합원 200여 명이 속한 4공장 1라인의 현장위원들이 주말 특근 거부를 결의했다.

4공장 1라인은 신차종인 팰리세이드를 생산하고 있다. 팰리세이드는 현대차 사측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데서 큰 구실을 한 차종이다. 더욱이 사측은 북미 수출을 노리고 증산을 계획 중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측은 다급했을 것이다.

결국 공장장이 대의원을 찾아와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한다. 이후 4공장에서는 현장 통제가 약화됐다. 노동자들은 전처럼 다시 ‘두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징계는 여전히 철회되지 않았다. 사측이 징계를 철회해야 “진정 어린 사과” 아닌가? 사측이 말한 재발 방지 대책이 무엇인지도 여전히 알 수 없다. 그리고 현대차 사측이 전 공장을 대상으로 통제 지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4공장 사측이 위로부터 압력을 받아 언제 다시 공격을 재개할지 알 수 없다.

호시탐탐

더욱이 다른 공장들에서는 현장 통제가 계속되고 있다. 사측이 일부 공장에서 반발 때문에 잠시 주춤할 수 있지만, 다른 공장들을 공격하며 호시탐탐 반격의 기회를 노릴 수도 있다. 따라서

징계를 완전히 철회시켜야 한다.

아쉽게도 현대차지부나 4공장 대의원과 현장위원회 등은 현장 통제를 반대했지만, 징계 철회는 주장하지 않고 있다. 아마 징계 철회는 어렵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현장 분위기는 괜찮다. 여러 공장의 현장위원 등 활동가 13명이 발의한 “현장 탄압 분쇄! 부당 징계 철회! 현대차 조합원 서명”은 시작한 지 며칠 만에 여러 공장에서 수백 명이 참가했다. 5월 22일 현장위원 수련회에서도 참가자 상당수가 서명했다.

사측에게 분노하며 모두 서명하는 분위기다. “이번처럼 대량 징계는 이제 적이다.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닐 수도

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징계를 당했는데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 일부 현장위원들은 직접 서명지를 가져가서 동료들에게 받아 오기도 했다.

지부 집행부는 이런 기층 조합원들의 열망을 대변해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사측이 전 공장에 걸쳐서 현장 통제를 하고 있는 만큼 본관 항의 집회 등을 벌여서 조합원들의 투쟁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것은 향후 임단협 투쟁에도 도움이 될 일이다.

또, 기층의 좌파적 활동가들이 징계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한다. 일부 공장의 징계는 남의 일이 아니라 전체 조합원들의 문제다. 다 같이 나서야 한다.



장시간·고강도 노동을 하는 현대차 노동자들 ‘두 작업’으로 좀 더 쉬고자 한 게 왜 징계 사유가 돼야 하나



용어 설명

‘두 작업’

노동자들이 교대로 옆 동료의 일까지 한꺼번에 해 주는 것을 말한다. 현대차 노동자들이 피로 누적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고안한 방식이다.

“기초 질서 지키기?”

현대차 사측은 현장 통제 강화로 무엇을 노리는가?

김지태

현대차 사측이 ‘두 작업’이나 ‘올려치기’ 등 노동자들의 “변칙 근무”를 문제 삼으며 무더기 징계에 나섰다. 사측은 이를 “기초 질서 지키기”라고 포장하고 있다.

‘두 작업’이나 ‘올려치기’는 노동자들이 좀 더 쉬기 위해 자신의 일(또는 동료의 일)을 몰아서 하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일을 덜 하는 게 아니라 노동강도를 올려 빨리 끝내고 쉬는 것뿐이다.

지난 수년간 현대차에서는 노동강도가 올랐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2시간에 한 번씩 짧게 쉬고 나머지 시간에는 끈적없이 기계처럼 일해야 한다. “변칙 근무”는 비인간적인 생산 활동에 맞선 노동자들의 인간적인 반응이자 궁여지책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흡혈귀처럼 오직 살아 있는 노동을 흡수”해 기계를 돌리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강도 높은 노동 후에 잠시 쉬라는 휴식조차 못마땅해 한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노동자가 노동하는 시간은 자본가가 자신이 구매한 노동력을 소비하는 시간이다. 만약 노동자가 자본가의 처분에 맡긴 시간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는 자본가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된다.”

사측은 노동자들이 근무 시간에 쉬고 있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더 쥐어짤 여지를 발견했을 것이다. 사측과 보수 언론들은 현대차 노동자들이 너무 여유를 부려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줄곧 비난해 왔다.

따라서 사측은 징계로 노동자를 위축시켜 ‘두 작업’을 막고, 장차 노동강도 강화나 인력 감축 등 더한 공격으로 나아가려는 것일 수 있다.

더욱이 노동자들에게 ‘늘면서 고임금 받는 노동귀족’이라는 프레임에 뒤집어씌워 청년 실업 해결의 결립물로 지목하고 노동조건을 공격할 수도 있다. 아마 저질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와 비교하면서 그렇게 할 것이다.

즉, 사측이 말하는 “기초 질서”는 노

동자들을 자신들 마음대로 착취할 권리를 뜻하는 것이다.

물론 현대차 노동자들은 강력한 투쟁 전통과 조직력을 갖추고 있다. 현장 통제에도 맞서 싸워 왔다. 그래서 사측이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번에도 노동자들이 반발하자 일부 공장에서는 통제가 완화됐다.

또한, 매년 임금·단체협상 투쟁을 앞두고 현장 통제 시도는 강화됐다가 곧 느슨해졌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공격을 ‘잠시 피하면 되는 소나기’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두 작업’에 대해 사측이 실제로 징계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만큼 안이하게 대처할 일이 결코 아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현장 통제 강화 시도를 으레 지나가는 일처럼 여기고 넘기면 더 큰 공격이 닥칠 때 맞서 싸우기 어려워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하부영 집행부는 사측의 현장 통제를 비판하긴 했지만 “기초 질서 지키기” 자체를 반대하

는 일에는 뜻미지근하다. 아마 기업 경쟁력 강화 논리를 수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기업 경쟁력 강화에 협력해야 할까

하부영 집행부는 지난해 출범 직후 신차 적시 생산, 품질 향상 등 기업 경쟁력 향상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을 지키려면 그래야 한다면서 말이다.

사측은 신차를 생산할 때마다 노동강도를 높이고 외주화를 확대하려고 했다. 기층 대의원들은 이에 대해 사측과 협상할 권한을 갖고 있었고 노동자들은 그것을 이용해 투쟁하기도 했다. 그런데 하부영 집행부가 하겠다는 신차 적시 생산은 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하부영 집행부는 사측과 ‘창립 50주년, 노사관계 30주년 특별합의’를 맺었다. 신차를 적시에 뽑을 수 있도록 대의원들이 갖고 있던 권한을 약화시키는 내용이었다.

안전 사고나 기계 고장 등으로 인한

라인 가동 정지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장 노동자들의 대응력을 떨어뜨린 것이다.

이처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측과 협력한다는 기조는 사측의 현장 통제력 강화 허용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되면 사측이 장차 고용 등을 공격했을 때 대응할 힘이 취약해지기 쉽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업 경쟁력 강화는 늘 착취 강화로 이어져 노동자들의 고통을 증대시켰다. 폭스바겐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1990년대 위기에 처한 폭스바겐에서는 고용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노조가 임금 등을 양보했다.

그러나 사측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임금 동결, 이중임금제,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시도해 노동자들을 공격했다. 노조는 일련의 공격들에 제대로 맞서지 못했고, 사기가 떨어진 노동자 1만 3000여 명이 결국 조기 퇴사했다.

현대차의 좌파적 활동가들은 노조의 경쟁력 강화 협력을 비판하고 사측의 현장 통제 강화에 단호하게 반대하는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건설 현장 무인타워크레인 사고는 증가하고 있다

투쟁 예고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 “일감도 없고, 대출 없이는 살기 어렵다”

장우성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소형 무인타워크레인 규제 강화’를 요구하며 6월 4~5일 1박 2일간 파업을 하고 상경투쟁을 벌인다.

노동자들은 임금 7퍼센트 인상을 비롯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임대사 측은 건설 경기 침체를 이유로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고 기존에 단협으로 정했던 휴일도 축소하는 등 오히려 노동조건 후퇴를 강요하고 있다.

“(지부조합원 400여 명) 중 130여 명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1년 일해도 또다시 8개월, 10개월은 쉬어야 하니 400만 원 월급으로도 대출없이 생활이 어려워요.”

경기남부지역에서 23년째 타워크레인 기사로 일하는 김범진 씨의 말은 노동자들의 고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노동자들은 사측이 지금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번 파업 상경투쟁에 이어 전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전 사각지대

노동자들은 안전을 위해 3톤 미만 소형 무인타워크레인 사용 기준도 강화하라고 요구한다.

소형 무인타워크레인은 유인타워크레인과의 달리 별도의 조종석 없이 지상에서 리모콘으로 조작할 수 있는 장비다. 비교적 가벼운 자재를 나룰 수 있어 소규모 빌라나 주택 건설현장에 많이 쓰인다. 지상에서 조작하기 때문에 안전상 10층 이상 고층 건물을 짓는 데는 부적절하다.

그런데 2017년 타워크레인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벌어져 정부가 유인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와 사고발생 시 사측 책임을 강화하자, 대형 건설현장에서도 규제가 느슨한 무인타워크레인을 투입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2013년에 13대에 불과하던 소형 무인타워크레인은 2018년에 1800여 대로 늘어났다. 특히 타워크레인 안전규제가 강화된 2018년에만 1000대 넘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대형 타워크레인 등록대수가 4475대이니 소형 크레인은 전체 타워크레인 중 30퍼센트를 차지한다.

그러나 소형 무인타워크레인은 안전 규제에 헛점이 많다.

무인타워크레인 수요가 늘자 유인타워크레인의 조종석을 떼거나, 중국에서 값싸게 들여 온 노후 부품을 짜집기하는 불법개조가 횡행하고 있다.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고 1년간 현장교육을 해야 하는 유인타워크레인과의 달리 무인타워크레인은 20시간 교육만 받아도 운전 자격이 부여된다. 그래서 많은 건설사들은 하청업체 관리자에 무인타워크레인 자격을 취득하도록 해 인건비를 줄이려 한다. 그러나 무인타워크레인 자격증 교육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정부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그렇게 할 경우 이미 무인타워크레인 운전투입된 노동자들의 추가 교육에 필요한 비용(임금 포함)은 건설사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 교육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자격증보다는 채용 후 현장 교육 비용을 높여야 한다.

이처럼 무인타워크레인이 안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무인타워크레인 사고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6년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만 30건으로 집계됐다.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8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한 건을 제외하고 모두 사상자가 발생했다.

또, 유인타워크레인은 단협으로 일요휴무를 강제하고 있는데, 무인타워크레인은 일요일에도 사용할 수 있으니 사측은 무인타워크레인을 더 선호한다. 형틀목수, 철근 노동자들이 “일요일은 주휴수당 받고 쉬고 싶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건설사들은 노동자들을 더 쥐어짤 공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10층 이상 고층 공사나 타워크레인 지브(사람의 팔처럼 길게 뻗어 사물을 실어 나르는 타워크레인 구조물)의 길이가 30미터 이상일 때는 무인타워크레인 사용을 제한해 안전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무인타워크레인도 일요휴무를 강제하라고 요구하는 등 건설노동자 전체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킬 방안을 제시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지난해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0건?

한편, 정부는 2018년 한 해 동안 타워크레인 사망사고가 0건이었다며 자화자찬한다. 타워크레인 사고는 노동자 목숨을 위협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사고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2018년 11월 청주에서 타워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거푸집이 떨어져 지상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고는 타워크레인 자체의 문제로 벌어진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의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2019년 1월에도 광주 건설현장에서 무인타워크레인 인양물이 쏟아져 노동자 두 명이 목숨을 잃었다.

정부가 타워크레인 안전 규제를 강화했지만(20년 연식제한, 수입 타워크레인의 수입면장, 제작증, 제원표 제출 등), 여전히 헛점들이 많아서 외국에서 20년간 사용한 노후 장비도 몇 가지 서류만 구비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또,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의 75퍼센트가 설치·해체 작업 중에 발생하는데, 이 작업을 담당하는 팀은 재하청 업체 소속으로 비용 절감을 위해 여전히 ‘빨리빨리’를 강요받고 있다.

지난해 사망사고가 줄어든 것은 정부의 감독·처벌이 강화된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연이은 사고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타워크레인 기사, 설치·해체 노동자들이 위험 작업시 극도의 긴장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노동자들은 지적한다.

타워크레인을 직접 다루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되고 노동자들이 안전관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측의 시도대로 노동조건이 후퇴되면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안전을 돌아볼 여력이 없을 것이다.

노동조건·안전 개선을 위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화물연대

정부가 안전운임제 실시해 적정 운송료 보장하라

6월 1일 화물연대 조합원 수천 명이 부산 신항에 모여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노동자들은 정부에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한시적 안전운임제를 전면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또, 컨테이너 화물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도 촉구한다.

컨테이너 화물노동자들의 삶은 경기 침체로 인한 물동량 감소와 운송사의 운송료 인하 압박으로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수백 킬로미터를 내달려 항만에 도착했을 때, 상하차를 위해 두 세 시간을 길 위에서 마냥 기다려야 하는 현실은 부족한 휴식시간을 더 갉아 먹는다. 상하차를 위한 시설과 인력이 확충돼야 하지만 항만 당국과 터미널 운영사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절규한다. “잠 좀 자가면서, 대출 더 안 받고, 집에 단돈 100~200만 원이라도 갚아줄 수 있으면 좋겠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이 적정 운송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다. 화물연대는 출범한

2002년부터 이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문재인은 대선 때 안전운임제 도입을 약속했다.

그러나 2018년 국회에서 통과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안전운임제를 일부 화물차량(전체의 10퍼센트)에만 적용하고, 그마저도 2020~2022년에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더구나 내년 운송료를 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는 노동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구성돼 있다. 노동자들의 기대에 턱없이 모자란 운임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난 4월 13일 화물노동자들을 비롯한 특수고용 노동자 2만여 명은 노동기본권 보장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국회에 책임을 미루고 나아가 개악안을 추진하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은 정부의 거둬들이는 말 바꾸기와 배신, 화주와 운송사의 노동조건 후퇴 압박에 투쟁으로 응답할 체비를 갖추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장우성

노동기본권 보장! 운송료 인상!

레미콘 노동자들 투쟁 기지개 켜다

곳곳에서 레미콘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

6월 1일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앞서 수도권의 레미콘(콘크리트믹서 트럭) 노동자들이 모여 ‘레미콘 노동자 전진대회’를 연다. 5월 31일 부산에서는 최근 노동조합으로 가입한 레미콘 조합원 1000여 명이 참가하는 레미콘 지회 발대식이 열린다. 지난주에는 울산 16개 레미콘 회사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운송비 5000원 인상을 요구하며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20년 전, 레미콘 노동자들은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선두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나섰다. 1990년대 정규직이었던 레미콘 노동자들은 사용자들의 강요로 도급계약을 맺고 지입제의 굴레에 매인 특수고용 노동자가 됐다. 1997년 경제 위기 이후에 월수입이 1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정도로 조건이 열악해지자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투쟁에 나서기 시작했다.

특히 2001년 4월부터 163일간 치열하게 전개한 전면 파업은 특수고용노동자의 열악한 현실과 노동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여의도 파업 농성장에 경찰력을 투입해 무자비하게 짓밟았고,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노동자 수백 명을 내쫓았다. 이런 무자비한 탄압 속에서 3000명에 이르던 레미콘 조합원은 600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2013년 울산에서 레미콘 노동자들이 다시 투쟁이 벌이고 조직화가 성과를 거두자, 다시금 희망이 움트기 시작했다.

게다가 최근 건설 경기가 침체하자 운송 횟수에 따라 임금(운송료)을 받는 레미콘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 열악해지고 있다.

최근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투쟁에 나서자, 레미콘 노동자들도 다시금 노동조합의 깃발로 모이기 시작하고 있다.

“지역 내 16개 업체 노동자 대부분이 노조로 조직된 울산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대부분은 운송료가 10년째 거의 동결 수준이고 회당 운송료도 (울산보다) 몇만 원씩 낮아요. 매달 170만 원에서 200만 원가량의 차량 할부금과 보험료, 유지비까지 빠져나가면 정말 손에 남는 게 없어요.”(울산의 한 레미콘 노동자)

오랜 침묵을 깨고 다시금 투쟁의 기지개를 켜는 레미콘 노동자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자.

장우성

노동자 희생 강요할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하라

박설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이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전면파업 중이다. 지난 월요일에는 해당 안전이 다뤄지는 5월 31일 주주총회를 나흘 앞두고 조합원 수백 명이 전격적으로 주주총회장을 점거했다. 수백 명이 건물 안팎을 에워쌌고, 천막 농성장 수십 개가 차려졌다. 파업 대오와 지역대책위가 집회를 이어 가며 투쟁 열기를 더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법인 분할이 낳을 고용 불안과 단체협약 · 노조권리 후퇴에 분통을 터뜨리며 깊은 분노를 토했다.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희생해야 하는가?”, “노동자 다 죽이는 법인 분할 중단하라!”

법인 분할은 대우조선 인수합병과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기 위한 절차다. 사측은 현대중공업을 지주회사(한국조선해양)와 자회사(현대중공업 생산 공장)로 쪼개고, 부채 대부분을 현대중공업에 떠넘기려 한다. 그렇게 되면 부채비율이 현행 60퍼센트에서 110퍼센트로 갑절 가까이 뛴 것이고,

사측은 그만큼 노동자들을 쥐어짜려 할 것이다.

사측과 보수 언론이 이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을 “불법”, “폭도”라고 비난하는 것은 위선이다. 사측은 노조 간부 · 조합원 60여 명을 업무방해, 폭행죄로 고소하며 용서는 없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사측이야말로 지난 4년간 죄 없는 노동자들을 혹독하게 쥐어짜 배당금을 늘리고 편법 경영승계를 추진하는 날강도 같은 짓을 해 왔다. 그리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또다시 수십만 노동자와 지역민의 삶을 짓밟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현대중공업 사측에 온갖 특혜를 주며 대우조선 매각과 구조조정을 밀어붙인 장본인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4월 발표한 ‘조선업 발전 전략’에서 인수합병과 설비 · 인력 축소 등 강력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했다.

민주당 울산시장 송철호도 최근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를 만나 현대중공업의 분사 이전 반대를 조건부로 대우조선 인수합병(기업결합)을 승인하라고 설득했다. 이런 송철호에 중재를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다.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하고 압박해야 한다.

점거 투쟁이 연대의 초점을 제공하다 — 단호하게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지속하자

현대중공업지부가 주주총회장 점거에 들어가자 수많은 노동자들의 시선이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으로 몰렸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언론 보도가 줄을 이었다.

점거 투쟁은 확실히 지역 차원을 넘어 전국적으로 여론을 환기시키는 중요한 구실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노동자들이 주주총회를 막으려 하는지, 법인 분할이 무엇이고 왜 문제인지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법인 분할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자 연대도 확산되고 있다. 인근 사업장의 노동자들과 지역 단체들이 점거 농성장을 찾았고, 인수합병의 당사자인 대우조선지회는 경찰 침탈 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영남권 노동자대회 참가 지침을 전국 확대간부로 확대했다.

노동자들이 법인과 사측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단호하게 투쟁한 것이 중요한 정치적 효과를 낸 것이다.

지금 사측은 주주총회 장소를 변경해 법인 분할을 강행 통과시키려 한다. 그러나 비록 사측이 그런 야비한 짓을 하더라도, 이번 점거 투쟁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이 투쟁의 정치적 성과를 디딤돌 삼아 투쟁을 지속 · 확대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 그러면 앞으로 법인 분할 이후 이어질 구조조정과 대우조선 인수합병에 제동을 걸 수 있다.

1999년 시애틀에서 열린 WTO 회담 반대 투쟁이 비록 회담 자체를 완전히 무산시키지는 못했지만, 국제적인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을 탄생시키고 확산하는 중요한 성과를 만들었던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사측이 주주총회에서 법인 분할을 기어이 강행하더라도 투쟁이 끝났다고 자포자기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점거 투쟁으로 만든 정치적 기회를 이용해 투쟁과 연대를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 특히 매각 저지에 나선 대우조선 노동자들과의 연대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법인 분할이 결정될 주주총회장을 점거하고 집회 중인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대우조선 매각 반대에도 함께해야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저지하려면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대우조선 매각-인수합병 반대 투쟁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현대중공업 사측이 주주총회에 제출한 ‘법인 분할 계획서’는 분할의 목적으로 사업부문별 경쟁력 제고를 강조했다. 2017년 기업 분할 때처럼 경영 실적에 따라 임금 · 조건을 차등하며 노동자들을 경쟁시키겠다는 것이다.

대우조선 인수합병은 이를 심화시킬 것이다. 특히 대우조선은 현대중공업의 기존 자회사들과 달리 현대중공업과 유사 규모의 중복 사업부문이 많아 더한층 성과 경쟁과 구조조정을 압박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정부와 현대중공업 측은 해외 기업결합심사에서 설비 · 인력을 축소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진다. 설비 · 인력 축소는 정부의 조선산업 정책 방향이기도

하다.

현대중공업이 인수하는 쪽이라고 그 노동자들이 안전한 것은 결코 아니다. 지난 몇 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듯, 현대중공업 사측은 애당초 자기 노동자들에 대한 신의 따위는 없다. 오히려 인수합병을 기회로 고용을 위협하면서 그동안 추구했던 임금 · 복지 삭감, 비정규직화와 외주화 확대 등을 밀어붙이려 할 수 있다.

경제 위기 하에서 추진되는 인수합병에 구조조정이 없을 수 없다. 대우조선 인수합병과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을 같 같이 분리시켜 대우조선 매각은 내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대처한다면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막기 어렵다.

대우조선 인수합병과 현대중공업 구조조정이 결코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함께 저지 투쟁에 나서야 한다.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레닌주의가 스탈린주의를 낳았는가?
- ★ 고 김용균 특조위, 정부의 약속 위반과 발전사들의 방해로 난항
- ★ 신간 《문재인 정부, 촛불 염원을 저버리다》 서평
- ★ 한빛 1호기 아찔한 사고: 핵발전소 폐쇄하라
-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그재그 행보는 진보 지지층 실망 살 것
- ★ 장기 투쟁 사업장 세호호텔노조에 연대를
- ★ “6월 1일 복권서트” 박해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 인터뷰
- ★ 가톨릭교회는 낙태 제약 시도 말라
- ★ 스톤웰 항쟁 50주년: 성소수자 운동이 기억해야 할 급진적 전통



사진: 송철호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ILO 권고도, 해고자 원직복직 약속도 외면하는 문재인

양윤석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지 않고,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게다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안을 포함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완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비준은 거부한 채 국회로 공을 떠넘긴 것이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에 해당하는 노동기본권도 인정하지 않고, 전교조 법외노조도 철회하지 않은 채 노동계 요구를 반영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노동부 공문 한 장이면 해결될 텐데 말이다.

지난 5월 15일 국회토론회에서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교사·공무원은 노동3권은커녕 “노동0.5권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실제로는 0.25권에 불과하고, 단체행동권은 아예 0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ILO는 한국 정부에게 결사의 자유에 위반되는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하라고 십수 번 권고했다. 또, 정치 활동이나 법외노조를 이유로 해고된 조합원의 원상 회복을 권고했다.

정부가 사회적 대화 운운하며 질질 끌다가 국회로 떠넘긴 것이 위선적인 이유다.

현재 민주당은 ‘공무원노조특별법’



2018년 11월 9일 공무원노조 연가 투쟁 집회 도대체 문재인이 지킨 '약속'이 뭐가 있나

개정안으로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에 기초해 한정에 의원안을 발의했다. 이 안에는 노조 가입 허용 기준에서 직급 기준(현행 6급 이하) 삭제, 퇴직한 공무원의 노조 가입 허용, 소방공무원 노조 설립 허용 등이 있다.

그러나 한정에 안은 문제가 많다. 직급 기준은 삭제했지만, 여전히 직무에 따른 단결권 제한이 지나치게 넓어서

현행과 별 다를 바 없을 정도다. ILO는 “업무 및 기능과 무관하게 아무런 예외 없이 모든 직급의 공무원이 노조를 결성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하는데, 이조차 제대로 수용하지 않는 것이다. 소방공무원 노조도 설립만 허용할 뿐 다른 노동기본권 보장은 없다.

한정에 안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만 해고자가 노조 간부로

출마할 수 없게 제한한다.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 이는 그간 투쟁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해고된 조합원들이 노조 간부직을 맡지 못하게 해,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술책이다.

또한 파업, 태업 등 일체의 쟁의행위와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개선도 포함하지 않았다.

지금도 공무원 해직자 136명은 원

직복직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여당 의원인 홍익표가 해고자 복직 특별법을 발의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은 “불법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전공노조조합원을 복직”시키는 것이라며 악다구니를 부린다.

사기극

그러나 홍익표 안은 해직 기간 중 극히 일부만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사실상 신규채용 안과 다름없다. 노조의 요구인 원상회복과는 한참 동떨어진 안이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도 이 안에 부정적이다.

정부는 이런 국회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떠넘긴 것이다. 게다가 국회에는 핵심협약 비준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개악안이 제출돼 있다. 해직 공무원의 원직복직도,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인정도 한사코 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기극’에 맞서 흔들림 없이 투쟁에 나서야 한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6월 1일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 공동행동의 날’ 참가를 호소했다. 이는 노동기본권 쟁취,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관련기사 8~9면

임금 억제, 노동자 분열 조장

공무원 직무급제 추진 중단하라

지난 5월 22일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공무원노조를 비롯해 공무원 노동자들이 반발하자, 인사혁신처는 “결정된 바 없다”고 변명했다. 그러면서도 “공무원 보수체계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부합”하도록 “공무원 보수체계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연구용역의 목적은 “6급 이하 공무원 보수체계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가치 반영을 확대할 필요성 증대”다.

그동안 인사혁신처는 일부 언론이 제기해 온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 추진을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자료까지 냈지만 거짓말이었다.

이미 문재인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단순히 연공서열대로 임금이 올라가

는 구조는 옳지 않고,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지난 4월 기획재정부는 “현재 공공기관을 포함한 기업 일반의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고용노동부가 제작 중에 있으며 6월 중 제작을 완료하여 배포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정 임금?

정부는 ‘공정 임금’ 운운하며 연공급제(호봉제)를 비난한다. 그러나 과거 연공급제는 젊은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하면서 승진과 미래 보장을 미끼로 충성을 얻어낼 수 있었던 제도였다. 당시엔 사용자들에게 유리한 제도였는데 이제 노동자들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임금 부담이 커졌다. 1987년 노동자 투쟁으로 초임이 대폭 인상되고 차등 승급을 철폐하며 정기승급제

나 호봉제를 쟁취한 것도 사용자들이 연공급제 임금체계를 손보길 원하는 이유다. 결국 현재 호봉제 공격의 진정한 목적은 노동자 임금 억제다.

직무급이 도입되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기본급이 15퍼센트가량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특히 남성, 중장년층, 대졸자의 임금이 대폭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금 억제 효과가 정규직, 남성 노동자들에게만 미치는 것은 아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직무급제를 적용해 저임금을 고착화하고 있다.

직무급은 직무평가에 의해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정하고 그에 따라 등급을 매겨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임금체계다. 그런데 사용자가 하는 직무 평가가 공정한 리 만무하고 직무평가가 과

학적이라는 것도 사기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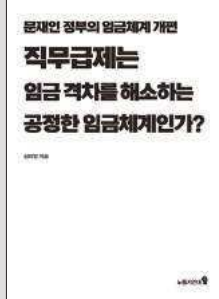
공무원 노동자의 업무는 정량적 계량이 불가능하고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직무평가는 노동자들의 직위와 임금에 등급을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관리자의 통제력을 강화한다.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을 부추기고 분열도 조장한다. 그러면 공무원 노동자들이 권력자들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기는 더 어려워 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추진해 온 공공기관 직무급제뿐 아니라 모든 부문의 임금체계 개편(임금 억제)을 본격화하기 위함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해 일각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 시도에 항의하며 ‘공무원부터 도입하라’고 한 것은 부적절했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 직무급제 도입 반대”를 천명했고, 직무급제 즉각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이를 위한 투쟁을 건설해 가야 한다.

추천 소책자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직무급제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공정한 임금체계인가?

김하영 지음, 노동자연대, 42쪽, 2,000원